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Jun. 2019

Vol. 30

6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영국과 스웨덴 채무관리기구의 역할 및 시사점
국가회계 발생주의 이해

재정 칼럼

추경편성의 경제적 효과
최근 세계 거시경제 흐름 변화와
경기 대응 추경 필요성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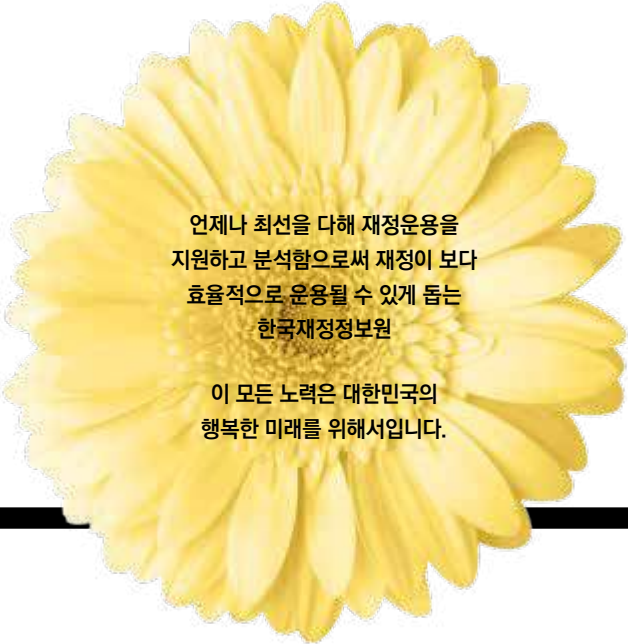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분석함으로써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돕는
한국재정정보원

이 모든 노력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미래 디자이너’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한국재정정보원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Vol. 30 Jun. 2019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활용부(02-6908-8583)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02-786-2999)

재정
INSIGHT

- 04 KPFIS 인사이트
① 영국과 스웨덴 채무관리기구의
역할 및 시사점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
② 국가회계 발생주의 이해
류진동 디브레인운영본부 차장
- 20 재정 칼럼
① 추경편성의 경제적 효과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② 최근 세계 거시경제 흐름 변화와
경기 대응 추경 필요성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 30 톺아보기
추가경정예산

재정
NOW

- 32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
① 최근 재정통계
② 분야별 통계 : 공공질서·안전 분야
- 46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 5G
- 50 해외재정동향
영국의 경제 및 재정 전망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재정
STORY

- 56 이달의 재정이야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예산의 밑거름
‘국민참여예산’
- 60 재정 Talk Talk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인가요?
- 62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조선시대 관리들은 월급만으로 살지 못했다
- 66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때로는 경제정책도 재정정책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 70 KPFIS의 서재
- 72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1
KPFIS-인사이드

<DMO, Debt Management Office>

영국과 스웨덴 채무관리기구의
역할 및 시사점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kr)

정부의 역할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재원은 세입에 의존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때 중·장기 차입비용을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 국채시장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채무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 및 상환과 관련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국내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모멘텀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상승(2007년 289.1조 원→2017년 675.1조 원)하고 있어 채무관리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배구조는 재무부 산하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채무관리기구 중 영국의 DMO와 스웨덴의 SNDO의 역할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01

● 국가채무관리 주체

국가채무관리의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부가 국가채무 전반에 관한 최종 책임은 있지만 채무관리기구(DMO)가 채무를 관리하는 형태, 재무부가 주도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형태, 재무부(주도)와 중앙은행이 긴밀한 공조하에 채무를 관리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표. 채무관리 주체

구분	전담 기구(DMO)	재무부 주도	재무부+중앙은행
최종 책임	재무부	재무부	재무부
채무관리	DMO	재무부	중앙은행
주요 특징	차입수요와 정책지침시달(재무부) 세부운영 자율결정(DMO)	국채의 발행과 위험관리 부서 분리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공조하 채무관리 차입 및 채무 전반 책임(재무부) 실질 채무관리(중앙은행)
해당 국가	영국, 스웨덴, 호주, 오스트리아 등	일본, 미국, 한국 등	덴마크, 캐나다, 아이슬란드 등

주: <부록 표> 참고

02

● 국가채무관리의 주요 내용: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관리는 채무목표 관리를 위한 핵심적 요소이자 중요한 수단이다. 위험관리는 채무구조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하고, 채무구조의 수정(또는 조정)을 통해 자금조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위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의미하는데, 주로 이자율, 환율, 상품가격 등의 변동에 따른 위험

차환위험: 채무만기 차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높은 이자율로 차환될 수 있는 위험

유동성위험: 보유하고 있던 유동자산이 급감하여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할 위험,
갑작스러운 부채상환 조건이 발생하여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

신용위험: 채무 상대방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위험

결제위험: 채무불이행 이외 다른 이유로 인해 결제를 하지 못해 채권자가 입게 될 위험

운영위험: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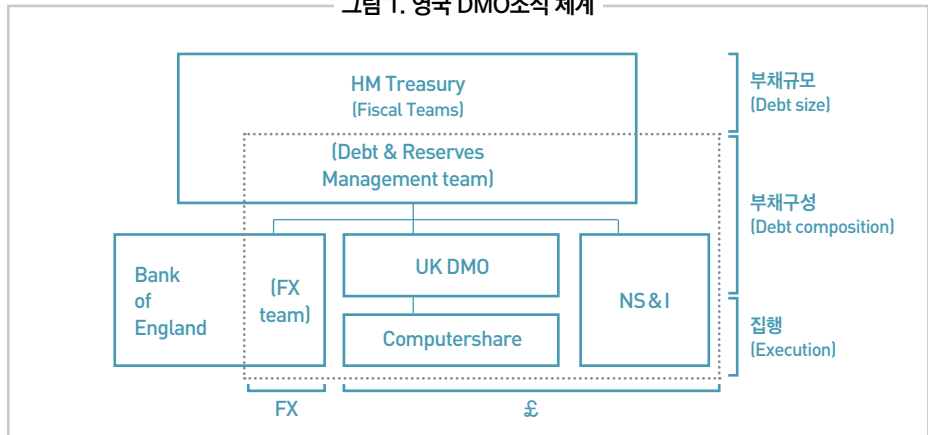


영국의 채무관리기구: DMO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전반적 책임은 재무부(HM Treasury)가 지지만 채무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DMO가 진다(1998년 4월 설립). 1998년 이전, 영란은행의 국채발행 기능, 채무관리와 통화정책 간에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영란은행의 독립성(통화·금융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DMO로 채무관리 기능이 이관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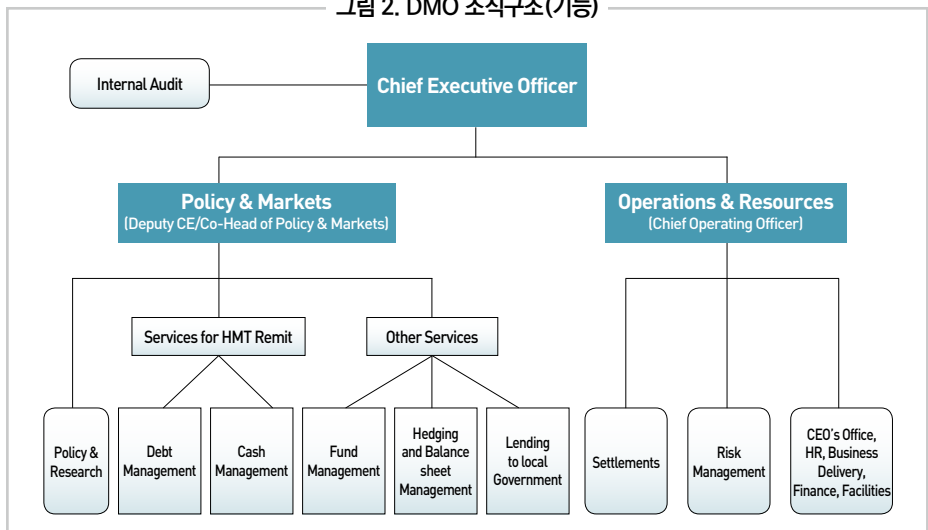
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적채무는 국채 및 우체국 저금(NS & I에 투자된 금액)이 있는데, 국채는 DMO가 관리하고, 우체국 저금은 NS & I가 관리하고 있다.

그림 1. 영국 DMO조직 체계



주: 점선 내부에 속하는 기관이 영국의 채무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FX : foreign exchange를 의미
 자료: NAO, 「The UK Debt Management Office – Borrowing on behalf of Government」, 2007.

그림 2. DMO 조직구조(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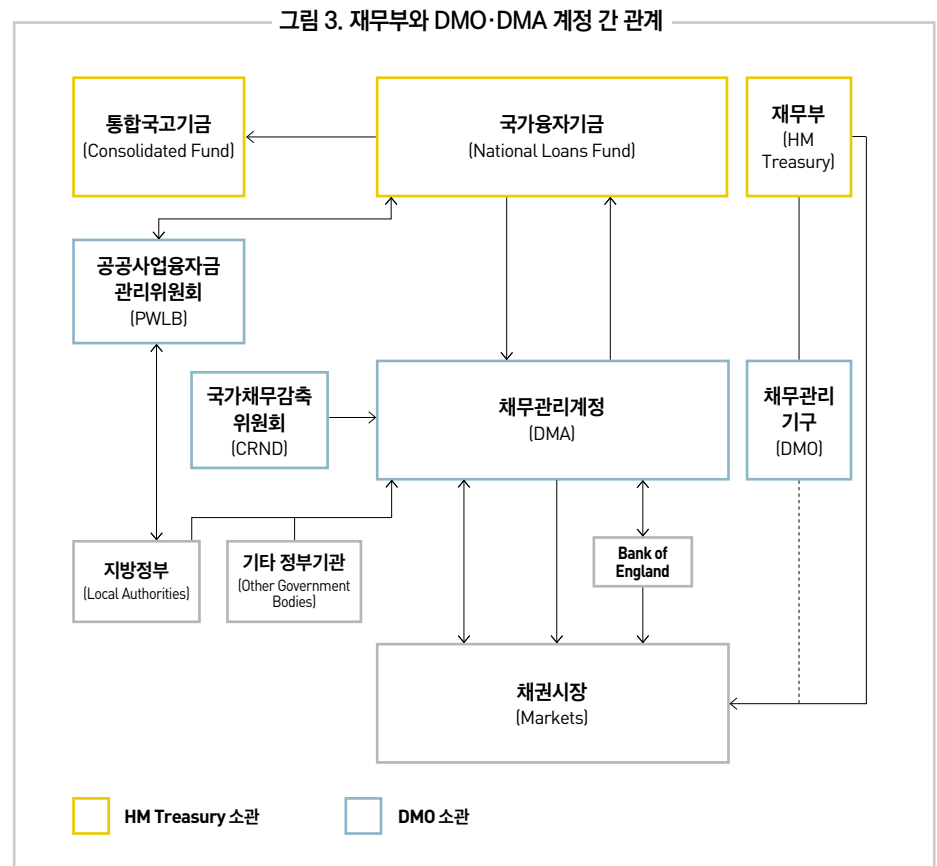


자료: DMO홈페이지(<https://www.dmo.gov.uk>)

DMO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정책 및 시장부서(Policy & Markets)는 현금 및 채무 등을 관리하고, 경영 및 지원부서(Operations & Resources)는 운영 전반 및 위험 등을 관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무관리위원회(Debt Management), 현금관리위원회(Cash Management), 기금관리위원회(Fund Management), 헤징 등 관리위원회(Hedging and Balance Sheet Management), 위험관리위원회(Risk Management) 등으로 구성된



다. 또한 채무관리계정(DMA, Debt Management Account), 공공사업융자금관리위원회(PWLB, Public Work Loan Board)¹, 국가채무감축위원회(CRND, Commissioners for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Debt)² 등이 편제되어 있다. 재무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국고기금(Consolidated Fund, 국채수입을 제외한 조세수입 등이 기금수입원임), 국가융자기금(National Loans Fund, 국채수입 및 원금회수금, 이자 등이 기금수입원임), 채무관리계정(Debt Management Account: DMA, 국가채무 및 현금거래를 위해 설치, 민간자산매입을 위해 영란은행에 현금융자)로 구성되며, DMO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는 DMA, CRND이다. 특히, DMA는 채권발행, 재정증권, 현금관리가 주된 기능이다. 아래 그림은 영국 재무부가 운영하는 기금계정과 DMO가 운영하는 계정과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주: glit는 영국 국채를 의미

자료: DMO,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6-2017」, 2017.

¹ 국가융자기금으로부터 지방정부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법적 기구이다(<https://www.dmo.gov.uk>).

² 정부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2002년 DMO로 통합되었다(<https://www.dmo.gov.uk>).

DMO는 재무부의 일부이지만, 독립 집행기구로 운영된다³. 재무부(HM Treasury)와 DMO의 역할은 'Executive Agency Framework Document'에 규정되어 있다. 재무부와 DMO는 시장 참여자들이 채무발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사결정 근거로 가능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는 재정정책에 관한 한 예산책임청(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의 예측을 기반으로 연간 재정지출액을 설정한다. DMO는 예측가 능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경매 일정 및 규모 등 세부정보는 사전에 발표할 책 임이 있다. 아울러 DMO의 장은 연간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장기 채무이자비용 최소화, 자 원의 효율적·효과적 관리 및 성과목표 달성, 관리계정 및 채무관리계정(DMA)의 책임자다. 채무관리 목표는 국가채무관리정책이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을 고 려하고 '장기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장기적'의 의미는 정 부가 예측기간을 초과하여 빌릴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금조달비 용'은 자금조달에 필요한 비용 즉 부채에 대한 이자와 채무발행 비용을 말한다(Debt and Reserves Management Report 2015-16). DMO가 관리하는 채무는 일반국채와 물가연 동국채이다. 일반국채(Conventional Gilt)는 단기, 중기, 장기국채로 구분되고, 물가연동 국채(Index-Linked Gilt)는 소매물가지수에 따라 원리금이 조정된다. DMO는 부채관리 전략을 선택할 때 이자율 위험, 리파이낸싱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운영 위 험 등을 관리하고 있다(DMO, 2018).



스웨덴의 채무관리기구: SNDO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재무부(HM Treasury)가 진다. 그러나 중 앙정부의 채무관리는 1789년 재무부 산하에 설립된 SNDO(Swedish National Debt Office)이다. SNDO는 재무부로부터 차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중앙정부차입 및 채 무관리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채무를 관리하고, 스웨덴 정부⁴와 국회가 결정한 가이 드라인을 토대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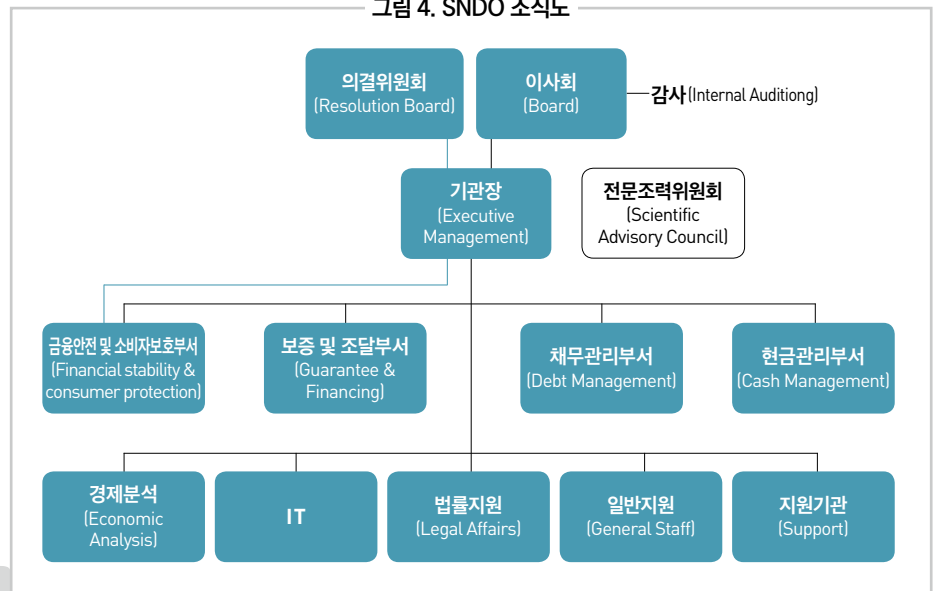
SNDO는 이사회(board)와 4개의 일선 부서와 5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SNDO의 활동을 감사하기 위해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기관장(Executive Management) 은 SNDO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4개 일선 부서는 직접적인 자금조달 및 운영업 무를 담당한다. 현금관리부서(Cash Management)는 정부의 계좌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채무관리부서(Debt Management)는 국채를 발행하여 국내 및 해 외의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중앙정부 채무관리업무를 담당한 다. 보증 및 조달부서(Guarantees & Financing)는 정부 및 국회의 결정에 따라 대출업

³ 재무장관은 DMO가 수행하는 정책을 결정하지만, 채무와 현금 관리 등 운영상 결정사항에 관한 권한은 DMO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SNDO가 제출한 가이드라인 제안서와 중앙은행의 제언서를 참고로 결정한다.

무와 정부보증채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안정 및 소비자보호부서(Financial Stability & Consumer Protection)는 금융안정성 및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5개 지원부서는 회계와 인적자원관리, 일선부서의 거래를 확인하고 결제하는 Back Office,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는 소통(Communication)과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는 General Staff,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Legal Affairs, SNDO의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관리하는 IT, 재정분석을 담당하는 Economic Analysis로 구성된다.

그림 4. SNDO 조직도



자료: SNDO 홈페이지(<https://www.riksgalden.se/en/aboutsndo/about-the-debt-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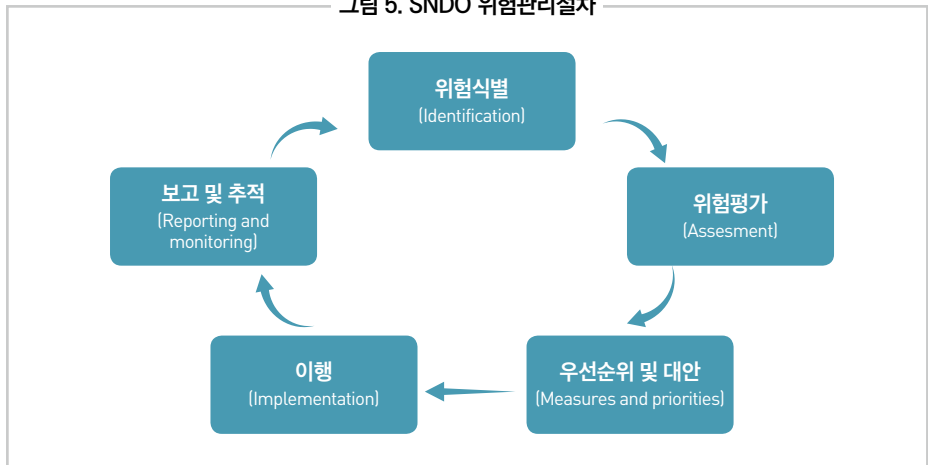
채무관리는 위험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하고, 채무관리와 통화정책간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SNDO는 아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첫째, Debt and Market Maintenance는 원활한 국채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고려한다. 둘째, Enter Into Transaction은 중앙정부의 채무관리상 운영위험을 감소시킨다. 셋째, Management of the Foreign Currency debt는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로 위험을 감소시킨다. SNDO가 관리하는 중앙정부채무는 명목국채(Nominal Krona Debt),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물가연동국채(Inflation-Linked Krona Debt, 중앙정부채무의 20% 차지), 국제자본시장에서 직접 또는 스왑으로 차입한 외화표시채무(Foreign Currency Debt)로 구성된다(SNDO, Financial and Risk Policy 2018).

SNDO는 중앙정부 채무의 위험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절차에 따라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고 확인한다. SNDO의 위험관리절차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위험식별 단계에서는 발생한 사건 및 발생 가능한 사건 등을 식별한다. 위험평가 단계에서는 식별된 위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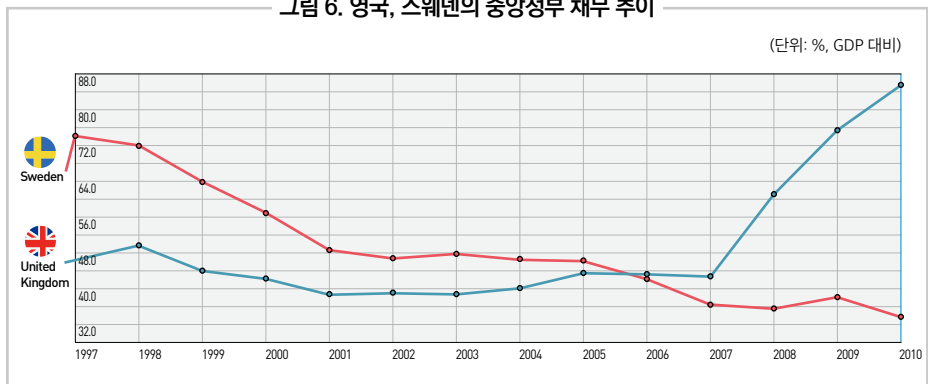
확률과 결과에 따라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등의 평가는 양적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양적평가가 제한되는 운영위험 등 동일한 절차 내에서 확인·평가·관리한다. 우선순위 및 대안 단계에서는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안을 작성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대안을 이행하며, 보고 및 추적 단계에서는 이행된 위험관리대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그림 5. SNDO 위험관리절차



자료: SNDO, 「Financial and Risk Policy」,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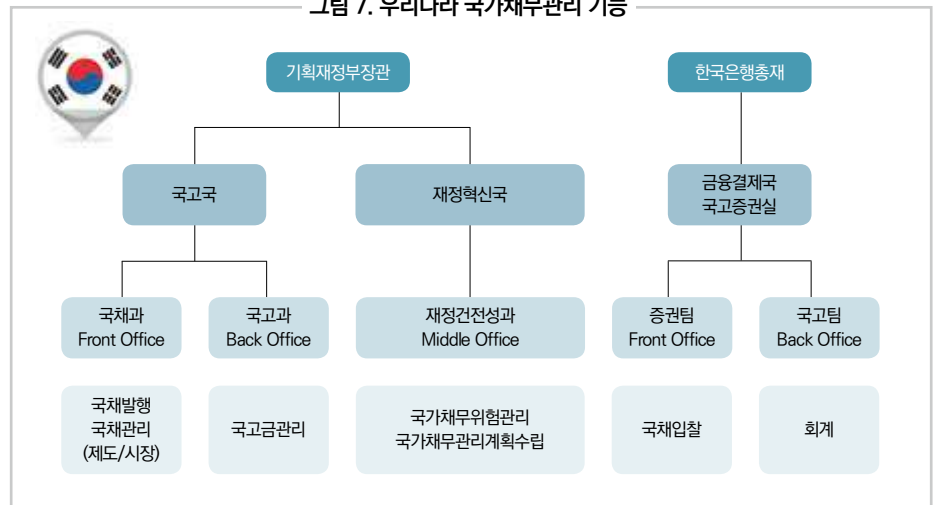
그림 6. 영국, 스웨덴의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 OECD Stat.

스웨덴은 1789년부터 SNDO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채무관리기구를 '도입'했다기보다는 DMO의 '원조'격으로 인식해야 한다. 스웨덴은 국가채무 상승세를 보이다가 1997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1998년 DMO를 설립한 직후 국가채무가 하향세를 유지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림 7.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 기능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채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채입찰과 회계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국채관리를 위해 국채과는 국채발행, 국채제도, 국채시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국고과는 국고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건전성과⁵는 국가채무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03

DMO와 SNDO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

독립 국가채무관리 전담기구 도입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 등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라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관리 전담기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 두느냐 또는 외청형태로 두느냐는 부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궁극적으로, 현재와 같이 국가채무의 총량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되, 독립전문기구가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전담기구 내 국채관리 기능 일원화

기획재정부 내 국고국과 재정혁신국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채관리에 한정하여 논의하면, 국고국은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재정혁신국은 국채

⁵ 재정건전성과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중앙정부를 포괄 범위로 하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분부채(D3) 등 4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위험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현행 국고국에서는 국채발행 및 국고금 관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재정혁신국(재정건전성과)은 국가채무위험관리,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여기서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의미하는데, 현행 국채과 및 국고과의 기능에 국채위험관리 기능의 이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일원화). 즉, 국채위험관리는 국고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국채발행, 국채관리, 위험관리 기능은 단일 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국가채무관리 전담기구 내 정책연구팀 구성

현재까지 국고국에서 국가채무의 포트폴리오 규모와 구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정치하고 과학적인 채무관리 분석 및 그에 따른 전략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정책·연구팀 구성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등 분석에 기초하여 국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구 미도입 전제

국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은행과 더욱 적극적이고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예: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터키). 아울러 현재 재정혁신국(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위험관리,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기능⁶을 국고국(국고과) 기능으로 이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은 현 세대에 남겨진 숙제이니 만큼 국가채무관리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⁶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재정건전성 관리차원에서 재정건전성과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되,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국고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NAO. (2007). 「The UK Debt Management Office - Borrowing on behalf of Government」.
- OECD. (2009). 「Central Government Debt: Statistical Yearbook 2009」.
- OECD. (2010). 「Central Government Debt: Statistical Yearbook 2000-2009」.
- S.E. (2018). 「SNDO, Financial and Risk Policy 2018」.
- U.K. DMO. (2018).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6-2017」.
- (2018). 「Debt Management Report 2018-19」.

참고사이트

- DMO 홈페이지. <https://www.dmo.gov.uk>
- SNDO 홈페이지. <https://www.rikskalden.se/en/aboutsndo/about-the-debt-office/>



[부록] 표. OECD 국가 채무관리기구 현황

국가	DMO 운용	재무부	재무부(주도)와 중앙은행(위임)	비 고
호주	○			1999년 7월 Australian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AOFM) 설립
오스트리아	○			1992년 1월 Austrian Federal Financing Agency(AFFA) 설립
벨기에		○		Treasury 내 Financing of the State and Financial Markets (3개 부서로 구성)에서 관리
캐나다			○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하여 관리
칠레		○		재무부가 관리
체코		○		재무부가 관리
덴마크			○	1991년 중앙은행에 위임되어 관리
핀란드	○			MOF내 The State Treasury에서 관리
프랑스		○		경제산업고용부에 속한 AFT에서 관리
독일	○			2000년 2월 German Finance Agency(GmbH) 설립
그리스		○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감독하 1999년 설립된 Public Debt Management Agency에서 관리
헝가리		○		Government Debt Management Agency Pte. Ltd에서 관리
아이슬란드			○	National Debt Management Agency에서 중앙은행으로 이관관리
아일랜드	○			1990년 말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 (NTMA) 설립
이탈리아		○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Public Debt Management Directorate)에서 관리
일본		○		재무성이 관리
한국		○		기획재정부에서 총괄·관리, 한국은행 사무처리
룩셈부르크		○		Minister of the Treasury and Budget 감독하 State Treasury에서 관리
멕시코		○		Minister of Finance and Public Credit가 관리
네덜란드		○		Minister of Finance의 Dutch State Treasury Agency이 관리
뉴질랜드	○			Treasury of the New Zealand의 Debt Management Office가 관리
노르웨이			○	재무부의 책임하 중앙은행의 협력관리
폴란드		○		재무부가 관리
포르투갈	○			1996년 12월 Portuguese Debt Management Office(IGCP) 설립
슬로바키아	○			2004년 Debt and Liquidity Management Agency(ARDAL) 설립
스페인		○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의 Public Debt Issuance and Management가 관리
스웨덴	○			1789년 Swedish National Debt Office(SNDO) 설립
스위스		○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에서 관리
터키			○	Undersecretariat of Treasury와 터키중앙은행(CBT)의 협력관리
영국	○			1998년 4월 UK Debt Management Office 설립
미국		○		재무부가 관리

자료: OECD(2009), 「Central Government Debt: Statistical Yearbook 2009」,와 OECD(2010),

「Central Government Debt: Statistical Yearbook 2000-2009」의 개별 국가별 Methodological Notes에 기초하여 저자가 작성

02
KPFIS-인사이트

국가회계 발생주의 이해

류진동 디브레인운영본부 차장(dowoomy@kpfis.kr)

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등을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받아 수정·반영하여 5월 31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9월 1일)전까지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예산결산·재무결산으로 구성이 되며, 그동안 나라재정에서는 예산결산 위주로 게재하였으나, 이번호에서는 재무결산의 기준이 되는 국가회계제도 및 발생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ccount



01

● 국가회계란

회계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회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보고하기 위한 회계(이하, 기업회계라 함)를 중심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이론이 정립되고 회계실무가 발전되어 왔다.

이에 반해 국가회계는 비교환거래가 주인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의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었으며, 국가회계가 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회계의 많은 부분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되고, 통제하는 국가회계는 기업의 회계환경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구분	국가회계	기업회계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국가가 제공한 서비스별 원가산출 및 평가가 중요 - 비교환거래가 중요	기업의 지속적인 이윤 추구 -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는 손익계산서가 중요 - 당기순이익이 중요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법적통제	수입, 지출, 자산관리, 채무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법적 통제를 받음 예)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등	모든 기업활동에서 법적 통제는 없으며 자율적 경영활동으로 발생 예) 예산: 기업의 목표를 제시하는 참조적 의미
정보이용자	국민 등으로 국가와 간접적으로 관련	주주, 채권자 등으로 기업과 직접 관련
자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용자산, 전비품, 문화재 등을 포함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만을 자산으로 규정

02

● 발생주의란

회계는 기록방법에 따라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거래의 인식방법에 따라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로 조합이 이루어진다.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거래만을 기록하며, 현금의 증감만을 거래의 결과로 보는 방식으로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가 쉽고, 확실한 측정이 가능하며, 현금의 흐름에 대한 통제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금을 제





외한 자산, 각종 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회계정보는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는 별도로 각 개별법에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국가재정법), 국가채권원재액보고서(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운용보고서(물품관리법)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변동 외에 권리·업무의 변동을 포함한 경제적 실질이 변동하는 시점부터 거래로 인식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금주의 회계보다 복잡하지만 다수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거래환경하에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적용하고 있다.

표 2.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

구분	발생주의	현금주의
거래인식	권리·업무의 변동을 포함한 경제적 실질이 변동하는 시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점
부기	복식부기(차변, 대변)	단식부기
표시	경제적 실질 가치로 자산부채 표시	취득원가로 표시
기록방식	자산부채의 변동을 동시 기록	자산, 부채 별도 기록
장단점	복잡하여 전문가 필요 제반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다양한 회계정보 산출	전문지식 없이도 이해 가능 현금의 흐름에 대한 통제가 명확

03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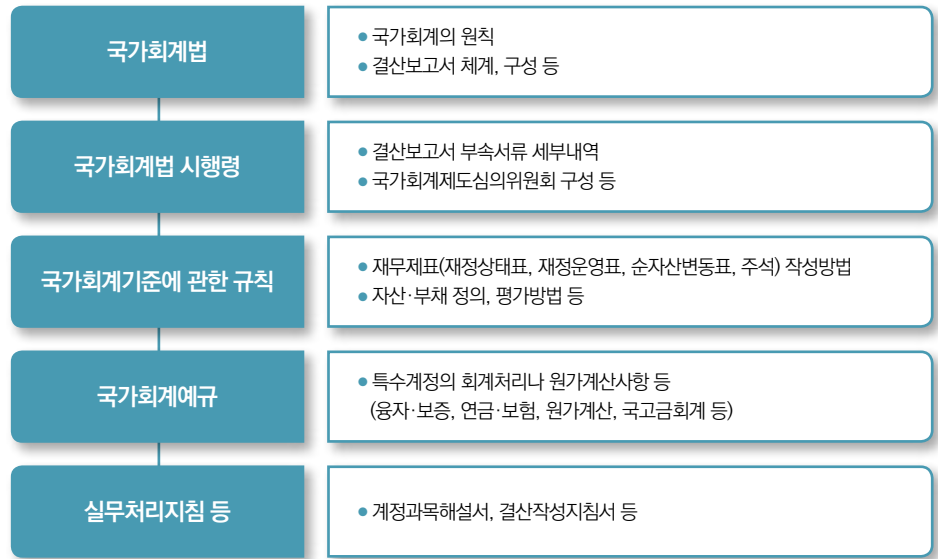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국가회계가 1960년대에 도입되어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예산회계정보만으로는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파악이 힘들어 정부의 재정상태나 재정운영의 결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한 국가회계법(2007년)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회계기준(2009년)의 제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2007년) 및 국가회계기준센터(現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설립(2010년)을 통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을 가속화하고 그 결실을 거두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는 예산회계와 대비하여 ‘재무회계’라고 지칭하며, 기존의 예산회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통하여 세입세출 정보에 국가재정의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회계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예산회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림 1. 국가회계 법규체계



04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성과

정부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첫째, 계약에 따라 향후 재정지출이 확정된 국가채무(국가재정법 제91조 제2항 등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동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만을 관리하여 연금충당부채와 같이 지출시기와 금액을 알 수 없었지만,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잠재부채를 인식하면서 국가의 중장기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풍부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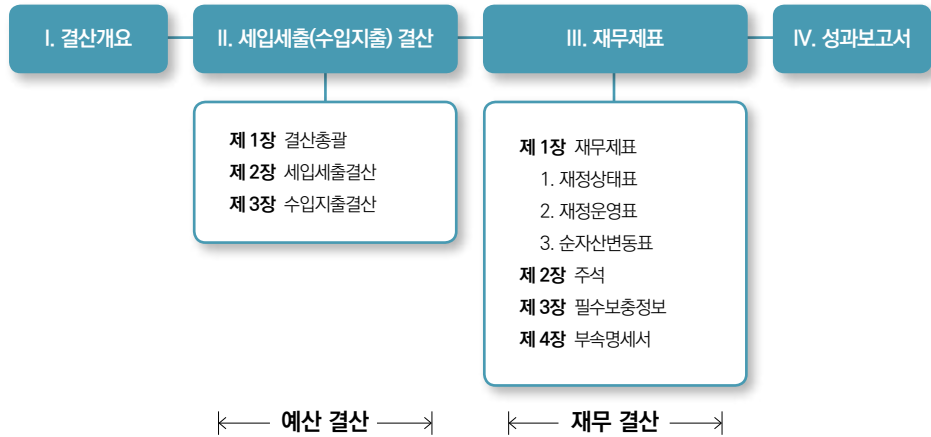
둘째, 국가 재정상태표의 자산부문에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은 물론 사회기반시설과 건설중인자산까지 반영함으로써 국가 자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셋째,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착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재정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국가회계는 현금의 입출만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방식을 따랐으므로 회계적인 부채의 개념조차 없었다. 그러나 국가채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한 회계측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 부채수치의 산출근거가 명확해졌고 위에서 언급한 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 뿐만 아니라 미지급비용이나 선수수익과 같은 발생주의 부채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별 투입원가 정보의 산출에 따라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된 점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의 중요한 성과이다.

그림 2. 국가결산보고서 구성 체계



05

국가 재무결산 주요 현황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126.6조, 부채는 1,683.4조 원이다.

(단위: 조 원, %)

구분		2018(A)	2017(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순자산		443.2	506.7	△63.5	△12.5
자산	합계	2,126.6	2,062.5	64.1	3.1
	유동자산	401.2	394.4	6.8	1.7
	투자자산	827.9	786.4	41.5	5.3
	일반유형자산	557.6	546.7	10.9	2.0
	사회기반시설	329.5	324.6	4.9	1.5
	무형자산	1.4	1.6	△0.2	△12.5
	기타 비유동자산	9.0	8.8	0.2	2.3
부채	합계	1,683.4	1,555.8	127.6	8.2
	유동부채	139.3	140.2	△0.9	△0.6
	장기차입부채	505.0	478.4	26.6	5.6
	장기충당부채	998.6	902.2	96.4	10.7
	기타 유동부채	40.5	35.0	5.5	15.7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343.3조, 국세수익 등 비교환수익은 351.1조 원이다.

(단위: 조 원, %)

구분		2018(A)	2017(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재정운영 결과		△7.8	21.1	△28.9	△137.0
재정운영 순원가	합계	343.3	345.2	△1.9	△0.6
	프로그램원가	344.6	328.4	16.2	4.9
	관리운영비	26.5	25.4	1.1	4.3
	비배분비용	23.7	34.7	△11.0	△31.7
	비배분수익	△51.5	△43.3	△8.2	△18.9
비교환수익	합계	351.1	324.1	27.0	8.3
	국세수익	294.9	266.1	28.8	10.8
	부담금수익	17.6	17.2	0.4	2.3
	사회보험수익	17.9	16.3	1.6	9.8
	제재금수익 등	6.1	6.6	△0.5	△7.6
	기타 재원조달 및 이전	14.6	17.9	△3.3	△18.4

【 참고 】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 특이사항(가장 비싼 자산현황)

건물	무형자산	고속도로	보유물품
정부세종청사 1단계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경부고속도로	슈퍼컴퓨터 4호기
장부가액 4,502억 원	취득가액 1,007억 원	장부가액 12.1조 원	장부가액 262억 원

06

맺음말

향후 차세대 dBrain 시스템에서는 국가회계제도와 관련하여 원가관리의 세분화, 발생주의 GFS 자동산출 등을 고려하여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활동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추경편성의 경제적 효과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shur@cau.ac.kr)



01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2019년 예상 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하는 2.6% 수준에 이를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각 전망기관은 내수와 수출의 위축세를 걱정하며, 이러한 정부의 예상이 낙관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총 6.7조 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 추경안은 이름 그대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밝힌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책효과분석에 따르면, 추경 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39.4%)과 비슷한 수준(39.5%)을 유지할 것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 톤에 더해 0.7만 톤 수준 추가 감축을 달성하고, 2019년 GDP 성장률은 0.1%p 정도 높아질 것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은 정규 예산안 편성 시에는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예컨대, 천재지변)가 발생하거나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로 편성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그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는 항상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추경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이번 추경안에 대해 바라는 바를 몇 자 적어본다.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는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가 유의하게 0보다 큰 지, 크다면 얼마나 큰 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지출한 1원 당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다만 재정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되어 경기부양 효과가 경제 전체에 퍼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책 시차(Policy Lag)가 존재하며, 이를 고려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몇 분기 이내에 관측된 경기부양효과를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승수는 다른 값을 갖는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재정지출 항목이나 형태 별로 다른 승수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는 재정부문의 총량이 같을지라도 구성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거시경제가 다른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소위 구성효과라 불리는 이 효과는 제한된 규모의 공적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효율성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재정정책은 정책시차의 존재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를 감안한 선제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금번 추경안의 처리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의 시차가 상당하며, 집행 이후의 시차를 고려하면(통화정책과 비교하여)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수단으로 시기조절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집행과정 자체의 소요시간을 감안한다면 정책시차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

지금까지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및 거시 통계가 어느 정도 긴 시간을 두고 축적됨에 따라 주로 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위에서 언급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추정방식과 분석 자료의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연구에 따라 재정정책의 유효성 및 재정승수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여러 추정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유의하지 않거나 재정승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 또한 정책 시차(예산 집행 이후)가 짧지 않아 재정승수의 부양효과가 늦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출승수와 조세승수가 모두 1보다 작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은 물론 유럽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Iletzki et.al.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변동환율제와 인플레이션 타겟팅(Inflation Targeting)을 채택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재정승수효과가 작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여 환율시스템이나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한다면, 높은 대외의존도(소규모 개방경제)가 우리나라의 재정승수가 낮게 추정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실증적으로는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만 재정지출의 형태 및 용도에 따라 정부의 재정활동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김승래·송호신·김우철(2009), 김배근(2011), 그리고 최진호·손민규(2013) 등은 지출의 형태별로는 이전지출의 승수효과가 경상지출이나 자본지출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보인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박승준(2009)은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야별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 GDP 증가를 위해서는 자본지출 비중이 높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민간소비의 증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들은 재정 규모 뿐 아니라 배분(구성) 조정에 있어 분야별·형태별 재정활동을 비교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¹ 기존 문헌의 정리와 관련하여 김태봉·허석균(2017)을 참고하시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정정책과 관련한 기존의 분석이 경제성장률이나 경기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잣대는 재정활동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형평성 제고도 대부분의 사람이 기대하는 재정의 순기능에 포함된다. 빈곤층에 대한 재정지원의 1차 목표는 소외 계층의 복지증진에 있다. 물론 이로 인해 경기가 부양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나 지출승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규모를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재정정책과 관련한 분석은 기존의 성장효과 혹은 경기부양효과 중심에서 재정의 형평성제고 효과도 같이 고려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확장시킬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이러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추경보다는 재정규모와 구성을 설계하는 장기적인 시계의 눈 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2019년 추경안에 대한 바람

가계부채문제나 원화약세에 대한 우려 등으로 통화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 침체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통계자료에 기초한 분석에서 재정승수의 크기나 유의성에 대해 일치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재정이 정책수단으로 무용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집행된 확장적 재정패키지가 경기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규모나 시기에 있어 과감한 재정정책은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². 하지만, 필요할 때 과감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통화정책당국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정부 추경안에서 밝힌 재원조달방안³을 살펴보면, 6.7조 원의 추경이 우리 정부의 재정여력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² 재정정책효과와 경기주기별 비대칭성(손민규·이종욱, 2014)이나 규모의 경제와 같은 요인들이 글로벌금융위기 시 집행된 확장적 재정패키지의 효과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통화정책과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정정책 단독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비하여 경기부양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Hur and Kim, 2012).

³ 추경재원은 각종 잉여금 및 특별회계·기금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3.6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발행하여 총당달 계획이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4.24.).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의 역할이 긴급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 있는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하게 편성된 것인지 세부항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 및 안전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출은 긴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에 우선 편성하여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정사업 중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지출을 필요로 하는 속성이 강한 사업들은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하에 추후 본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⁴.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된 항목들(무역금융이나 벤처·창업 지원 등)도 지출의 형태나 지출의 용도에 있어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정부가 예상한 바에 따르면, 6.7조 원의 추경안은 2019년 GDP 성장률을 0.1%p 정도 높여줄 것이라 한다. 2018년도 우리나라 GDP가 대략 1,782조 원 규모였음을 감안하고, 역산해 보면, 이번 추경안이 올해 집행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승수효과는 $0.26(=1.78/6.7)$ 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물론 예산집행의 시차나 복잡한 전달 경로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승수효과는 2019년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추경안의 당해 연도 승수효과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으며 경기하강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4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된 에너지 바우처나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경우 1회성 재정사업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태봉·허석균. (2017). “한국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 SVAR 추정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3호, pp.107-159.
- 김배근. (2011). “구조적 VAR 모형 및 세율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경제학연구, 제59집 제3호, pp.5-52.
- 김승래·송호산·김우철. (2009). “부문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홍균·박승준. (2012). “SVEC 모형을 이용한 재정정책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 pp.1~31.
- 박승준. (2009).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분야별 자원배분을 중심으로,” 경제현안분석, 제39호, 국회예산정책처.
- 손민규·이종욱. (2014). “우리나라 재정정책 효과의 비대칭성 분석,” 금융연구, 제28권 제2호, pp.45~74.
- 최진호·손민규. (2013).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 BOK 이슈리뷰, 제 2권 제2호.
- Hur, S. and S. Kim. (2012). “Fiscal Policies of Korea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13 No.3, pp.395-418.
- Ilzetzki, E., Mendoza, E. and Vegh, C. (2009). “How big (small?) are fiscal multipliers?” CEPR Policy Insight 39 September.



최근 세계 거시경제 흐름 변화와 경기 대응 추경 필요성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cfa20@hanmail.net)

02



한국은행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5%로,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4%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가 둔화되어 국회가 2019년 예산을 심의했던 2018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3.3% 수준으로 낮춰 보고 있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는데 수출 감소의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은 전분기 고성장 이후 마이너스 0.2%였던 2017년 4분기와 GDP 감소 폭과 변동 패턴이 유사해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1.8%로 봐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설명과 달리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4월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로 7년 만에 적자를 기



록했다. 외국인 투자자 배당 송금으로 4월엔 항상 본원소득수지가 적자여서 경상수지 흑자가 항상 감소하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이번에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그만큼 수출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최근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나빠지고, 그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 하강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2017년 중반 경기 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 하강 국면이었고, 설비·건설 투자 둔화와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지속되었고, 수출금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18년 8월 75.1%에서 2019년 4월 72.6%로 하락 추세에 있다.

더욱이 며칠 전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면서 미·중 수교의 기본 전제인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미국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신냉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중국, 미국과 긴밀한 무역관계에 있는 한국 수출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영향으로 한국경제의 경기 하강은 좀 더 길어지고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2019년 경기 전망은 상저하고로 2019년 중반 저점을 지나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런 기대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IMF 연례협의단은 정부 목표인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위해 GDP의 0.5% 이상, 즉 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정책 권고를 했다. 세계경제 전망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MF가 각국 정부에 경기 활성화 정책을 권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욱이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내수 확대를 위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더 필요하다. 작년만 해도 IMF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올해는 통화정책도 확장 운영을 권고했다. 최근 들어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가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실업률은 4월 4.4%로 실업자 수가 124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30~50대 남성 고용률 하락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는 IMF의 정책 권고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추경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 추경을 허용한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재난의 문제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야당이 그동안 고용위기, 고용대란, 고용참사라고 주장했으니 대량실업 추경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는 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실업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게 정부 책무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성장을 저하로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실업과 빈곤 문제 확대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가 오히려



려 더 악화될 수 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과 함께 중단기적으로 재정여력이 상당히 좋은 7개국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¹. 지금은 풍부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단기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실업을 줄이는 교과서적 거시경제정책을 써야 할 시기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2조 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5조 원으로 총 6.7조 원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추경예산으로 실질성장률이 약 0.1% 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예산이 전년대비 8.5% 증가한 470조 원의 슈퍼예산인데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작년 말 예산안을 심의했을 때엔 2019년 성장률을 2.6~2.7%로 봤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경기 하강이 더 심각하니 그에 맞게 선제적 경기대응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세

¹ IMF, 'Assessing Fiscal Space: An Update and Stocktaking', 2018.7.



계 거시경제학계는 거시경제 조절 정책수단으로 과거처럼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쓸 것을 권고하고, 특히 저물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IMF 연례협의단이 2.6%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9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 따른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대응 거시경제정책을 주로 통화정책에 의존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거시경제학계는 경기대응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쓸 것을 권고하고 특히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이었던 제이슨 퍼만이나 직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전미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올리버 블랑샤 등 거시경제학계의 석학들은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낮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며 실증 분석 결과 재정 확대가 민간 투자를 저해하기보다 오히려 촉진했으며, 확장 재정정책이 이자율을 높여 민간 투자를 저해한다는 구축효과도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국채금리가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의 재정 여력이 좋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국가채무 비율보다 경상성장률과 국채 금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며, 저금리·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재정지출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공공투자 기회가 있다면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장기 성장률과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은 불황을 방지하면 경제의 공급 능력이 감소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거시경제학자들은 저성장 침체가 지속되면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가 거시경제 전반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즉 한 국가의 공급 능력을 말하는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자본축적과 총요소생산성으로 불리는 기술혁신 능력으로 결정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실업자의 노동능력·인적자본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 위축으로 자본축적이 둔화되고, 모험적인 혁신 노력들의 성공 확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는 경우 정부는 실업을 줄이고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거시경제학계의 흐름을 반영해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편으로 감세정책을 펴면서 다른 한편 국채 발행으로 SOC투자를 하는 등 과감한 적자재정을 지속했고 그 결과 실업률 3%라는 완전고용 상태를 달성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은 미국경제가 현재 완전고용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8년 전 고실업률 상황일 때 수준의 적자재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다.

이번 추경 재원 중 3.6조 원은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한다. 문재인 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2018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38.2%인데, 25.4조 원 초과세수로 국가채무를 많이 갚아 국가채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6년 이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표.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비율 추이

(단위: %, GDP 대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채무 비율	31.6	32.3	34.3	35.9	37.8	38.2	38.2
일반정부 부채 비율	34.5	36.6	39.6	41.8	43.2	43.7	42.5
공공부문 부채 비율	56.5	59.6	62.9	64.5	64.2	63.1	60.4

주: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채무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 비금융공기업 부채임. GDP는 2010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 이용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불황 땀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더 타격을 받기 마련이기에 위기·재난 지역 공공일자리 확대, 실업급여·생계급여 확대와 지원조건 완화,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등 추경 지원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대책과 민생경제 추경을 분리해 총선용 민생경제 추경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황이 야기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다. 추경과 같은 경기대응 거시경제정책은 적시성이 생명이다. 국회는 추경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되 재정정책의 적시성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추가경정예산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kr)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②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및 발생 우려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 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

□ 예산의 편성·확정시기와 실제 집행에는 시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국회의 예산 확정 후 천재지변 또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예산 변경(추경)이 필요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증액(추가예산) 외에도 예산의 감액(경정예산)이 포함되며, 이 둘을 합쳐 추가경정예산으로 통칭

□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추경은 총 8회 편성되었으며, 2019년 추경규모*는 6.7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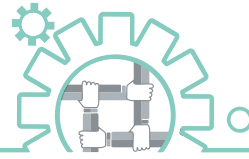
* 추경규모는 세출예산의 증/감액분만을 계상하지 않으며, 세입예산의 증/감액까지 모두 계상

○ 1998년, 1999년, 2001년, 2003년 등 2회 추경이 편성된 경우도 존재

그림 1. 연도별 추경편성 현황

(단위: 조 원)





□ 추경예산의 편성재원은 주로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국채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최근 5년간 추경에서는 2016~2018년은 초과세수의 비중이 크며, 2015년과 2019년은 국채의 비중이 높음

표. 추경예산 편성 자원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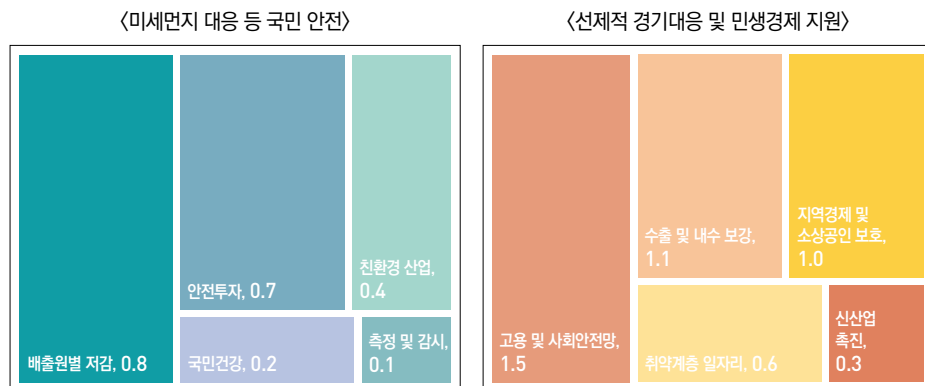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추경 규모	11.6	11.0	11.0	3.9	6.7
결산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포함)	0.7	1.2	1.1	2.6	0.4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1.5	-	1.3	1.3	2.7
국채 발행	9.4	-	-	-	3.6
세수 증가분	-	9.8	8.6	-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정부가 4월에 제출한 2019년 추경(안)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대형 산불 등 국민 안전의 중대한 위해 요인을 해소하고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그림 2. 2019년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구성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kr)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kr)

1. 최근 재정통계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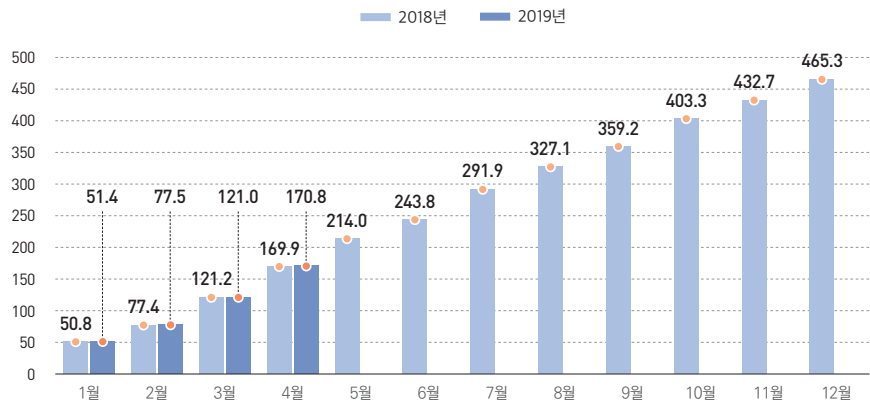
2019년 4월 중 총수입은 49.8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170.8조 원으로 진도율¹은 35.9%이고 전년 동기 대비 0.9조 원 증가(진도율 2.1%p 하락)하였다. 이 중 국세수입은 109.4조 원(전년 대비 0.5조 원 감소)이며, 세외수입은 10.1조 원(전년 대비 0.8조 원 감소), 기금수입은 51.3조 원(전년 대비 2.2조 원 증가)이다.

총수입

170.8조 원

총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2019년 4월 중 국세수입은 31.4조 원(부가가치세 17.1조 원, 소득세 5.6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09.4조 원으로 일반회계 106.4조 원, 특별회계는 3.0조 원으로 구성된다.

¹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47.7조 원이며 2019년 총수입 예산은 476.1조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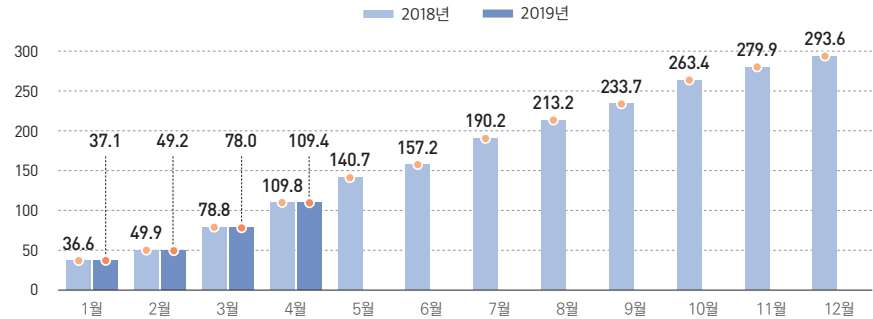


국세수입

109.4조 원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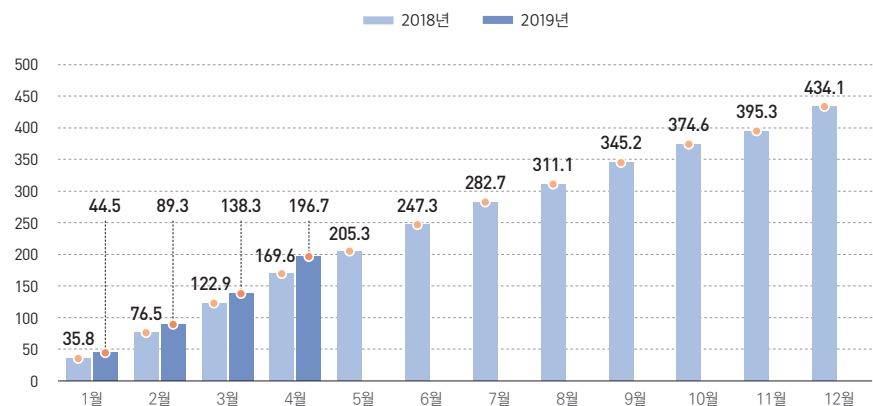
2019년 4월 중 총지출은 58.4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196.7조 원으로 진도율²은 41.9%이고 전년 동기 대비 27.0조 원 증가(진도율 2.7%p 상승)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13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9조 원 증가하였고, 기금은 49.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6조 원 증가하였다.

총지출

196.7조 원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²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지출 예산은 432.7조 원이며 2019년 총지출 예산은 469.6조 원이다.



2019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³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4월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은 114.4조 원으로, 연간 계획(252.6조 원) 대비 45.3%를 집행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는 94.3조 원(연간 계획 대비 45.1%), 40개 기금에서는 20.1조 원(연간 계획 대비 46.1%)을 집행하였다.

4월 말까지의 주요 분야별 집행률은 과학기술(70.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0.8%), 보건(55.1%), 통신(54.8%) 분야 순으로 높으며, 국방(27.9%), 교육(42.2%), 공공질서 및 안전(43.4%)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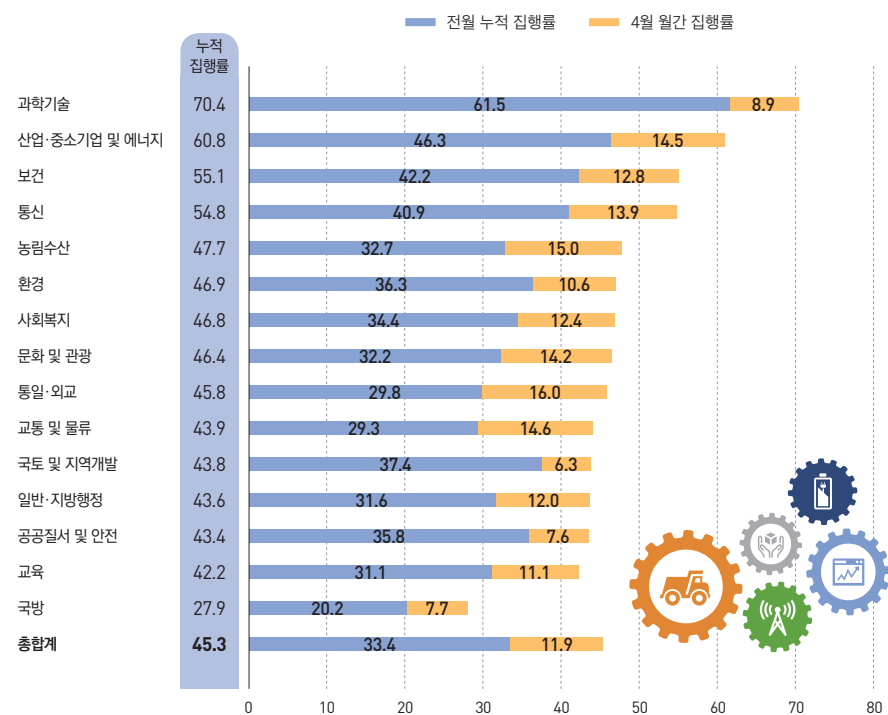
4월 월간 집행률은 11.9%이며, 분야별로는 통일·외교(16.0%), 농림수산(15.0%), 교통 및 물류(14.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4.5%)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누적 집행률
45.3%

월간 집행률
11.9%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³ 재정집행관리 점검 대상인 45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된다.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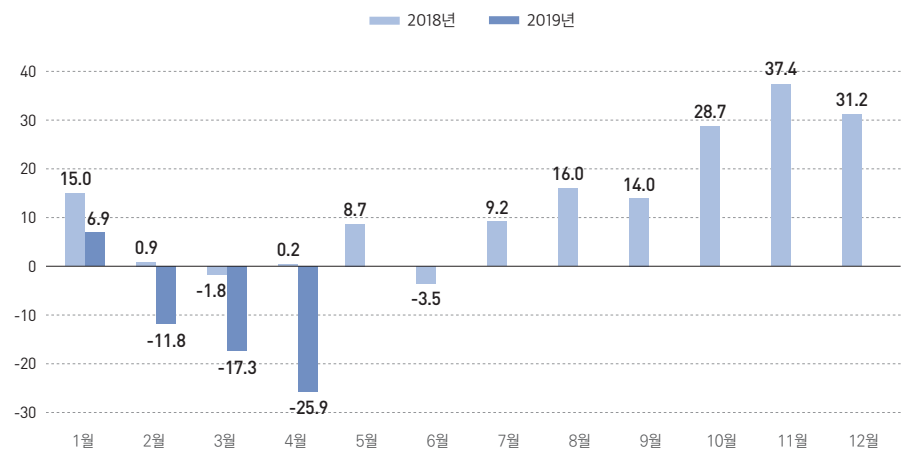
2019년 4월 통합재정수지는 25.9조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12.9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8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6.1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25.2조 원 악화되었으나, 이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출 확대 등에 기인한다.

통합재정수지

25.9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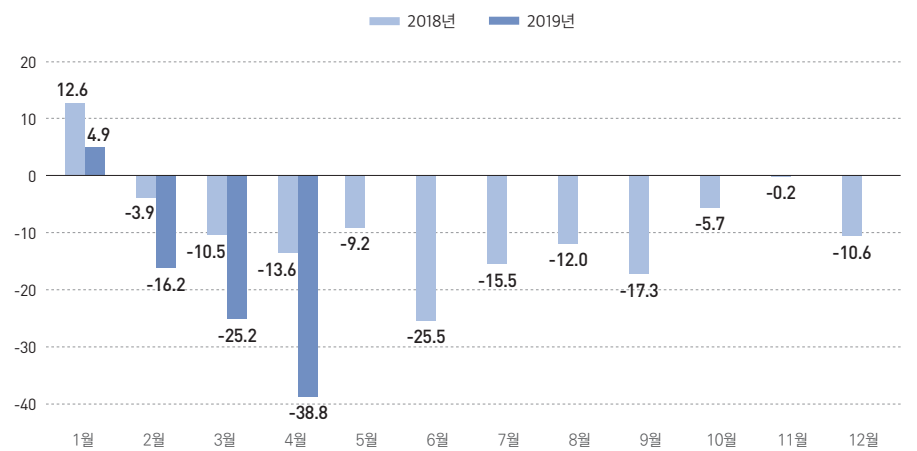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관리재정수지

38.8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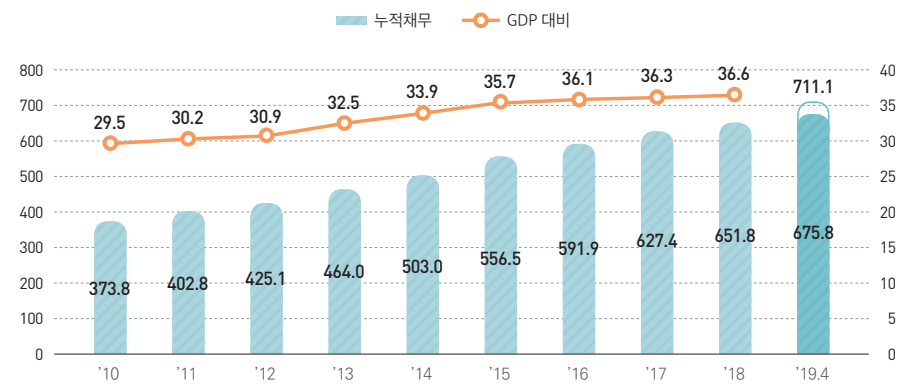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2019년 예산 상 중앙정부 채무⁴는 711.1조 원이며, 4월 말 현재 675.8조 원이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7.7조 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1.6조 원) 등에 따라 전월 대비 5.5조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2018년 결산 기준) 대비 24.0조 원 증가하였다.

중앙정부 채무

675.8조 원

중앙정부 채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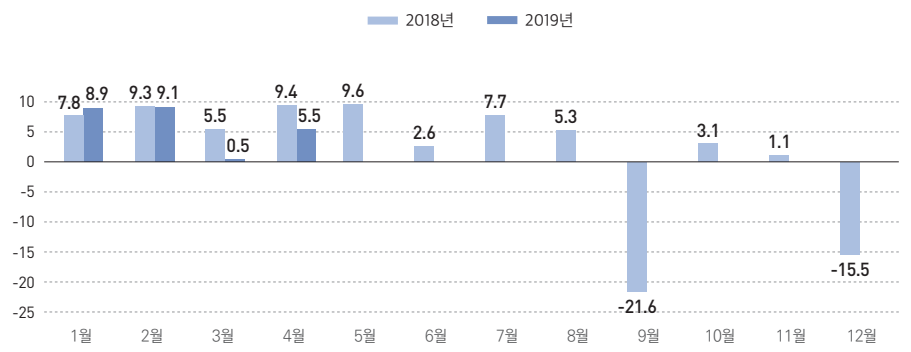
주: 2019년은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규모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순차입 전월 대비

-15.5조 원

중앙정부 채무 순차입 추이



주: 순차입이란 특정 기간 내에 국고채 발행 또는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증가 규모에서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감소 규모를 제외한 잔액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되며,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한다(2018년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680.7조 원으로 지방정부 채무(잠정치) 28.9조 원이 반영됨).



국유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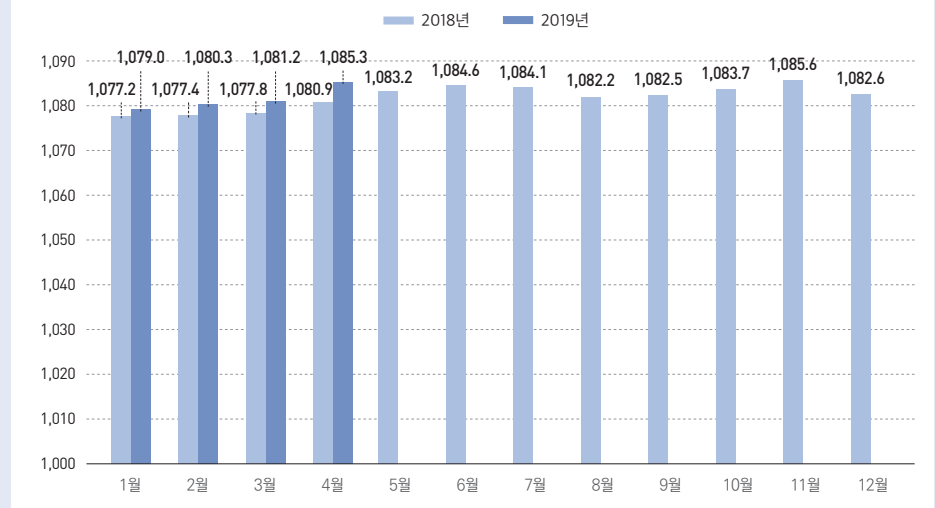
2019년 4월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1,085.3조 원으로 전월 대비 4.1조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⁵ 811.6조 원(전월 대비 3.0조 원 증가), 일반재산⁶ 273.7조 원(전월 대비 1.2조 원 증가)으로 구성된다.

국유재산 현액

1,085.3조 원

국유재산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년,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4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1조 5,058억 원이며 전월 대비 1조 2,776억 원 증가했다. 처분 총액은 1,960억 원이고 전월 대비 1,309억 원 감소하여, 4월 중 취득 총액이 처분 총액을 1조 3,098억 원 초과한다.



⁵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청·관사, 도로, 하천 등이 이에 해당된다.

⁶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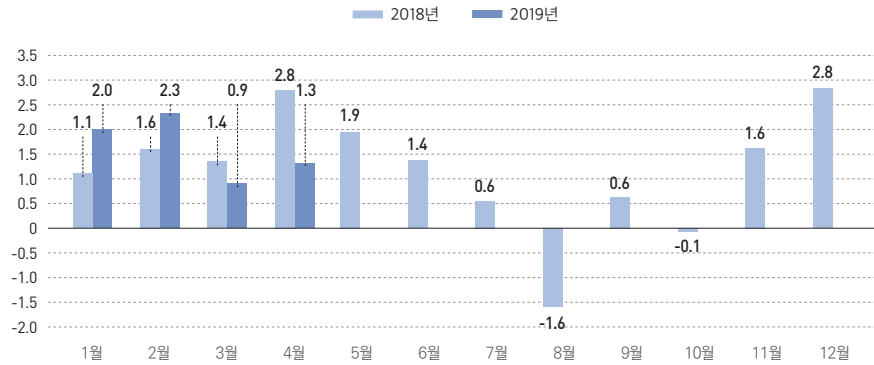


국유재산 순취득 총액

1.3조 원

국유재산 취득·처분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년,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3) 순취득이란 매입, 교환 및 환지, 신규등록 및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에서 매각, 교환 및 환지, 열실 및 양여로 인한 처분을 제외한 규모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국고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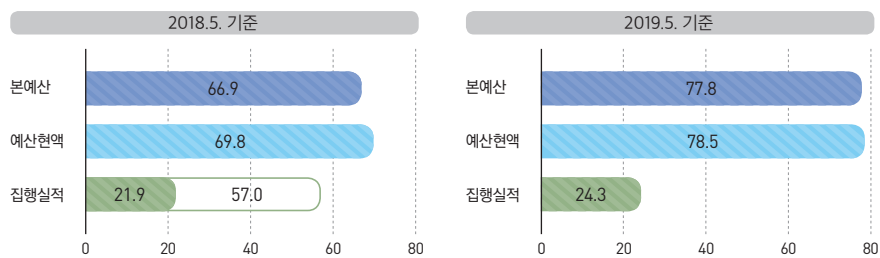
2019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77.8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66.9조 원에 비해 약 10.9조 원 증가하였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예산현액⁷은 78.5조 원이며, 5월 누적 실행 실적은 24.3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0% 실행행되었다(5월 누적 교부집행액⁸은 예산현액 대비 52.4%).

5월 누적 실행행률

31.0%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⁷ 전년도 이월액 등이 반영된 예산정보로써 당해연도 국회 확정 예산액과는 다를 수 있다.

⁸ 교부집행액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지급한 보조금 규모이며, 실행행액이란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전달(이체)된 보조금 규모를 의미한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18조 8,278억 원, 농림수산 1조 5,947억 원, 환경 8,01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163억 원, 문화 및 관광 7,04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507억 원이 실집행되었다. 예산현액 대비 교부액을 나타내는 교부집행률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3.1%로 가장 높지만,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액을 나타내는 실집행률은 사회복지 분야가 40.8%로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교부집행률

73.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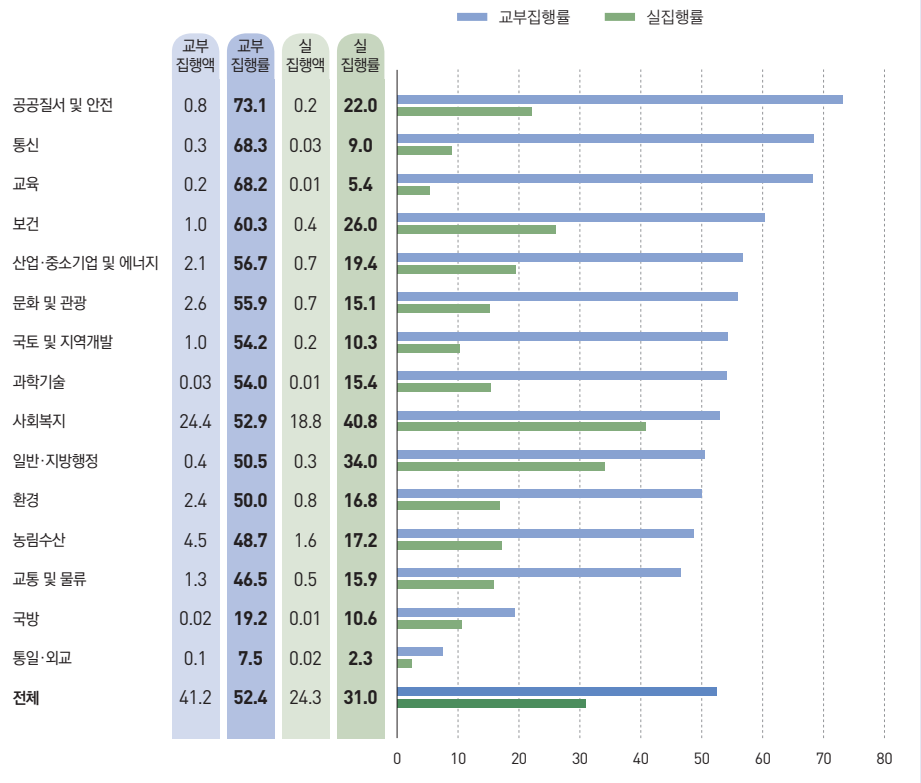
가장 높은 실집행률

40.8%

(사회복지 분야)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

(단위: 조 원, %)



주: 2019년 5월 누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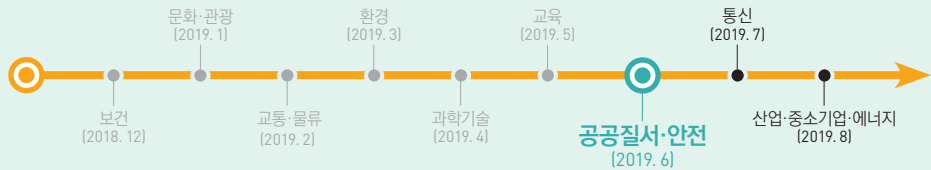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2. 분야별 통계: 공공질서·안전 분야

이번 호에서는 15대 분야(예비비 제외) 중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재정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구조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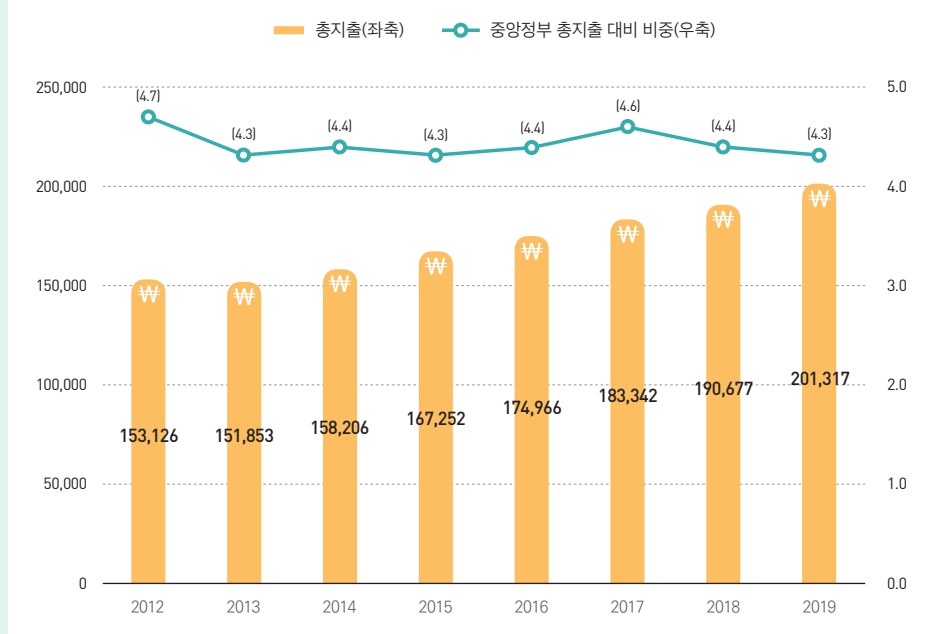
2019년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총지출은 20조 1,317억 원(총지출 대비 4.3%)으로 2018년(19조 677억 원) 대비 5.6%(1조 640억 원)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총지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총지출 대비 비중은 평균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20.1 조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추이

(단위: 억 원, %)



주: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일반회계 92.9%(18조 7,017억 원), 특별회계 3.2%(6,429억 원), 기금 3.9%(7,871억 원)로 편성되었다. 먼저 일반회계는 인건비(11조 8,388억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일반회계의 63.6%)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주요 소관인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등의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기금은 국유재관리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18.7조 원

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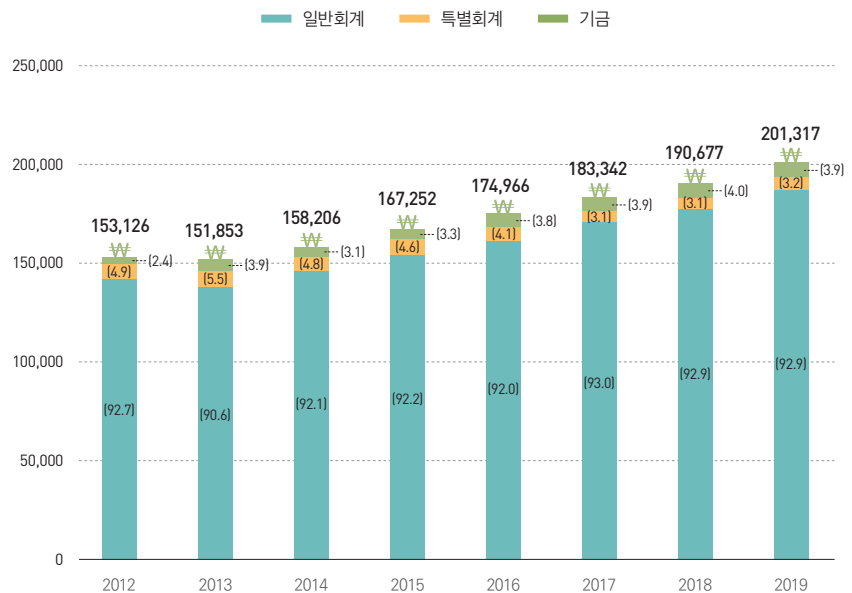
0.6조 원

기금

0.8조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억 원, %)



주 1)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 공공질서·안전 분야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6,429억 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660억 원으로(공공질서·안전 분야 특별회계 합계 대비 41.4%)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등기특별회계(2,303억 원, 35.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761억 원, 11.8%), 교도작업특별회계(704억 원, 11.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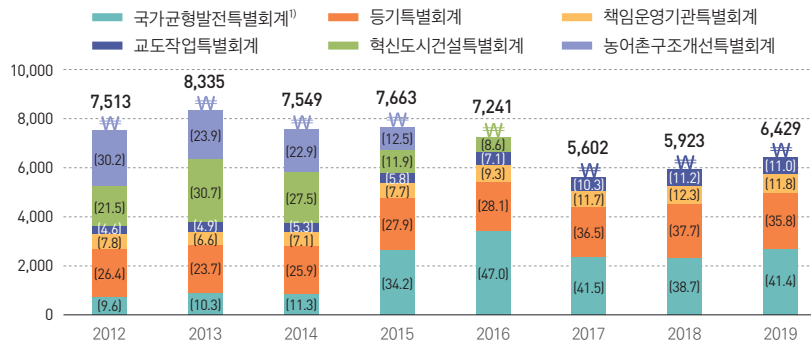
0.3조 원

등기특별회계

0.2조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특별회계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4년까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3)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특별회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기특별회계는 등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등기특별회계법」에 근거해 1994년 설치되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 용도폐지한 등기소 부지 및 시설 매각대금, 등기업무 관련 수입금, 이월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등기소의 설치 및 관리, 등기업무 관련 경비, 차입금·예수금 상환, 기타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에 지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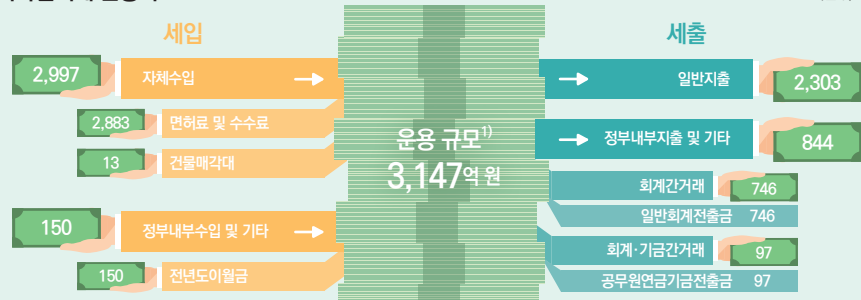
2019년 운용규모는 3,147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2,997억 원, 전년도 이월금 150억 원이며, 지출은 일반지출 2,303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844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 운용 규모

0.3조 원

등기특별회계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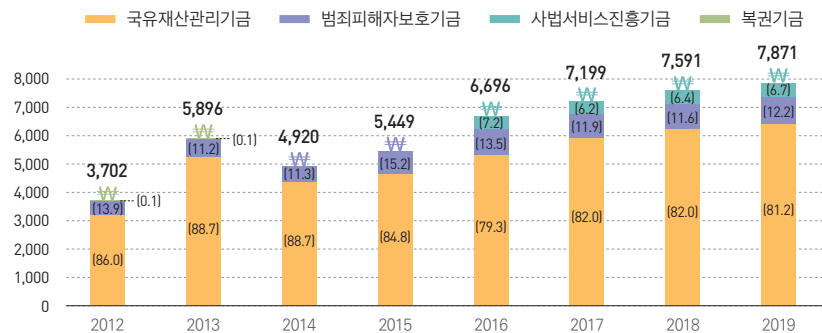
2019년 본예산 기준 공공질서·안전 분야 기금의 편성 규모는 7,871억 원이며 국유재산관리 기금이 6,389억 원으로(공공질서·안전 분야 기금 합계 대비 81.2%)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956억 원, 12.2%), 사법서비스진흥기금(526억 원, 6.7%)이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0.6조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기금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기금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근거해 2011년 설치되었다. 주요 세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벌금수납액,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¹,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자산, 기금운용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금 등이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및 보조금 교부,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업이나 활동,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활동 등에 지출이 편성된다.

2019년 운용규모는 1,011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37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824억 원, 여유자금회수 150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사업비 956억 원, 기금운영비 1억 원, 여유자금운용 55억 원으로 편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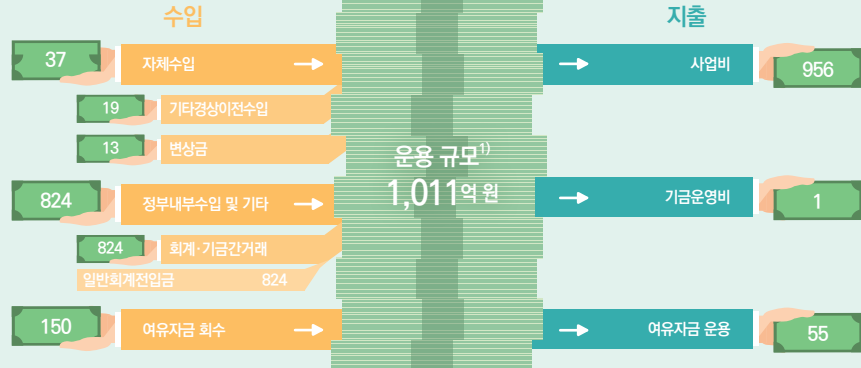
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2항(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따른 구상금으로,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기금 운용 규모
0.1 조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문별 재정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경찰, 법무 및 검찰, 법원 및 헌재, 해경, 재난관리 부문까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경찰 부문으로 56.4%(11조 3,558억 원)를 차지하고, 법무 및 검찰 부문 20.2%(4조 615억 원), 법원 및 헌재 부문 10.3%(2조 652억 원), 해경 부문 6.9%(1조 3,845억 원), 재난관리 부문 6.3%(1조 2,647억 원)이다.

경찰
11.4조 원

법무 및 검찰
4.1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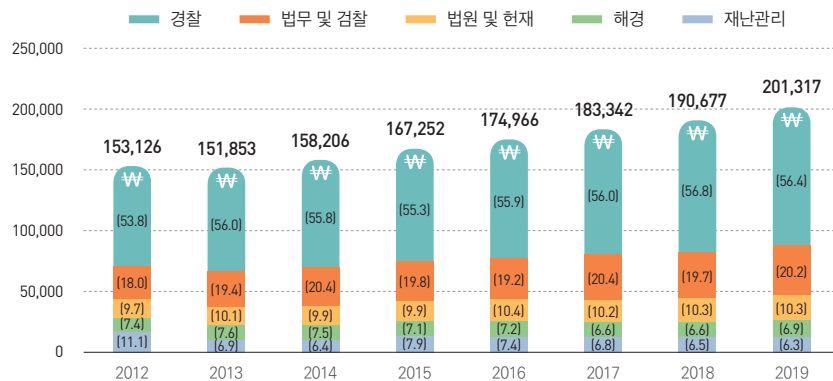
법원 및 헌재
2.1조 원

해경
1.4조 원

재난관리
1.3조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교육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2)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도 주요 사업

공공질서·안전 분야 주요 계속 사업은 규모가 큰 인건비² 지출을 제외하면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국가배상금지급 사업 등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화재안전 특별대책 사업이 편성되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0.4조 원

먼저,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2019년 3,959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배상금지급 사업

0.3조 원

국가배상금지급 사업(3,000억 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 공공영조물 설치·관리 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의 소송에서 승소한 자에 대해 법원판결금, 소송비용 등을 배상한다.

화재안전 특별대책 사업

325억 원

마지막으로 화재안전 특별대책 사업(325억 원)은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화재안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2019년 신규 편성되었다. 기존 제천·밀양화재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조치와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화재위험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굴하려는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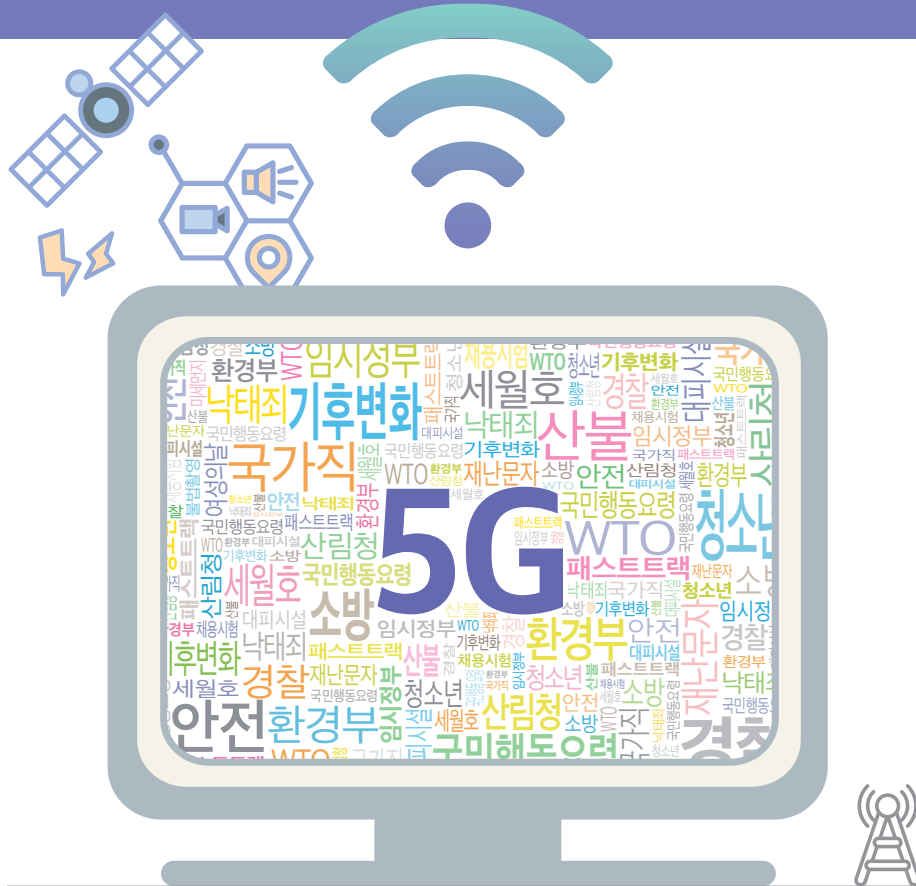


² 공공질서·안전 분야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방경찰청인건비(6조 6,724억 원), 경찰청인건비(1조 5,934억 원), 일반인건비(1조 1,073억 원), 교도소운영인건비(1조 342억 원), 검찰청운영인건비(7,233억 원), 지방관서인건비(7,082억 원) 순으로 편성되어있다.

이 달의 이슈 키워드 「5G」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5G'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기회'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개통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 창출에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5G 기반시설 투자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 (sgkim@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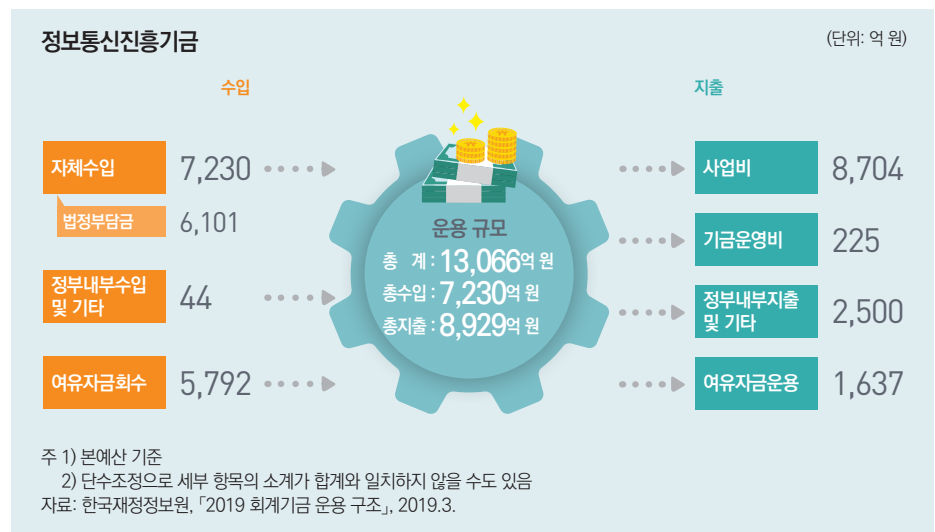
연관어

- 기회
- LTE
- 주파수
- 투자
- 지연
- 요금
- 통신망
- 4차 산업혁명
- 무제한
- 과학기술
- 증강현실
- 인프라
- 이동
- 자율주행
- 스마트시티
- 미래

5G란 방대한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¹로, 정부는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5G 주파수를 조기 할당하였으며, 최대 3%까지의 세액공제와 관련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낙찰가 3조 6,183억 원² 등으로 5G 네트워크 서비스 개통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전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대규모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파수할당 대가로 운용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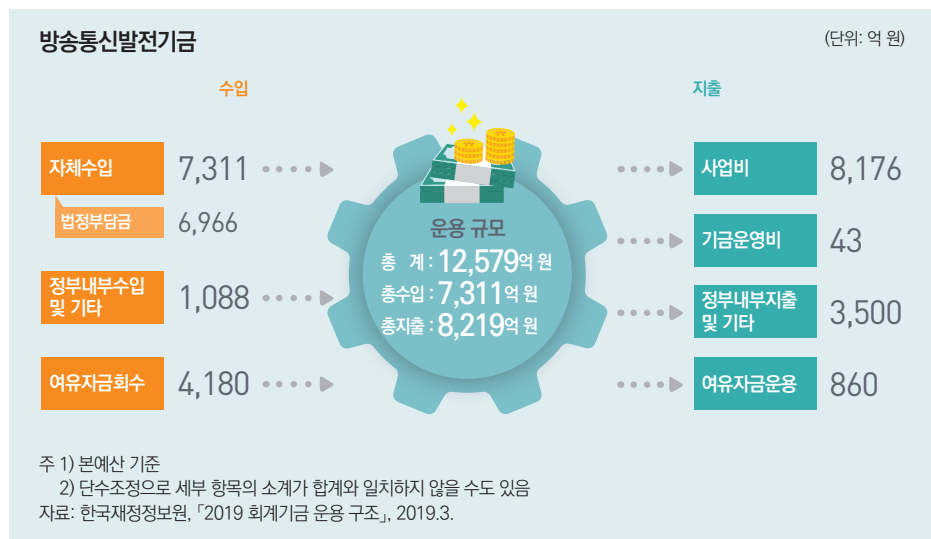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설치된 기금으로, 통신사업자 부담금,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대가의 55%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정보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하거나 관련 기반 조성 등에 쓰고 있다. 2019년 총계 기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1조 3,066억 원이며, 주파수할당 대가와 같은 법정부담금 6,101억 원이 포함된 자체수입 7,230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4억 원, 여유자금회수 5,792억 원 등의 수입과, 사업비 8,704억 원, 기금운영비 225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2,500억 원, 여유자금운용 1,637억 원 등의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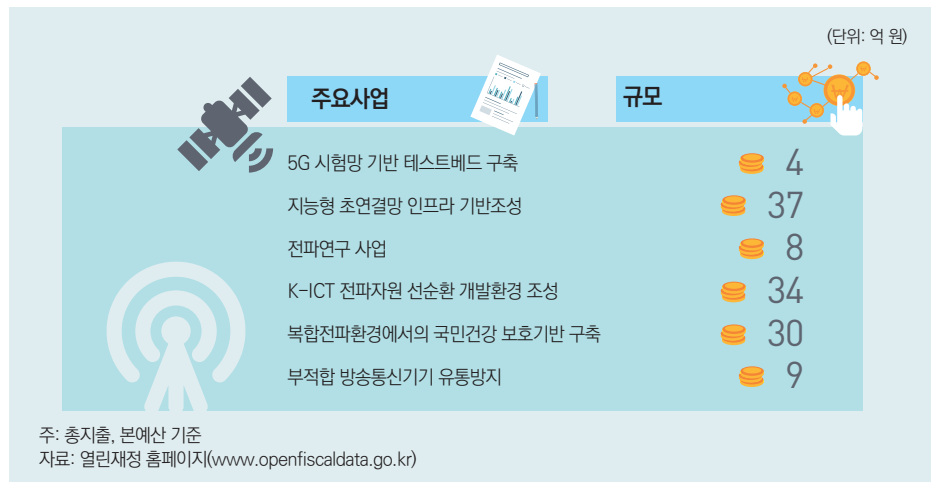
¹ 전송속도 최대 30Gbps, 전송지연(축각수준) 1ms, 기기 연결 ㎢당 최대 100 만개로 4G 대비 각각 20배, 0.1배, 10배 향상된 수준이다.

²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2018.6.18.

방송통신발전기금³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를 근거로 하여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설치되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재원은 방송사업자 분담금,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대가의 45% 등으로,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총계 기준 운용규모는 1조 2,579억 원이며, 수입은 주파수할당 대가와 같은 법정부담금(6,966억 원) 등 자체수입 7,311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88억 원, 여유자금회수 4,180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사업비 8,176억 원, 기금운영비 43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3,500억 원, 여유자금운용 860억 원으로 구성된다.



2019년 5G 관련 주요 재정사업



정부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0년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⁴ 외의 지역에서 5G 이동통신시설을 투자한 이동통신사에 법인세의 2%를 공제해줄 계획이다. 또한 법인세의 1% 한도 내에서 직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율의 20%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3%까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외에도 관련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주파수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4억 원)으로 중소기업에게 이동통신사 상용망 수준의 단말기와 통신망간 연동시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조성 사업(37억 원)으로 5G 네트워크,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선도 적용하여 신기술의 확산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정부는 5G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전파간섭을 분석하고 관련 기술을 제·개정하거나 국제기구(ITU 등)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연구 사업(8억 원)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5G 네트워크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전파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K-ICT 전파자원 선순환 개발환경 조성 사업(34억 원)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같은 5G 기반 무선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주파수 등 전파자원의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전파자원을 적기에 공급·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며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주파수 등의 전파자원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하기 복합전파환경에서의 국민 건강 보호기반 구축 사업(30억 원)과,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사업(9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전파환경에서의 국민건강 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5G 네트워크 보급으로 전자파 발생원이 다원화·복합화되는 환경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평가하고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사업은 5G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고, 통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기기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깨끗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고 부적합 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3 「방송법」에 의해 2000년 1월 방송발전기금으로 최초 설치된 이후 2010년 3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재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에 주파수할당 대가의 일부가 재원으로 추가되며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강화군 등 일부지역 제외), 수원 등 수도권 16개 시를 말한다.

영국의 경제 및 재정 전망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UNITED
KINGDOM

영국 예산책임청(OBR: 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2010년부터 매년 2회 경제 및 재정전망(EFO: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전망에서는 2023-24 회계연도까지 전망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영국의 2018-19 회계연도 이후 경제·재정 전망과 주요 특징에 대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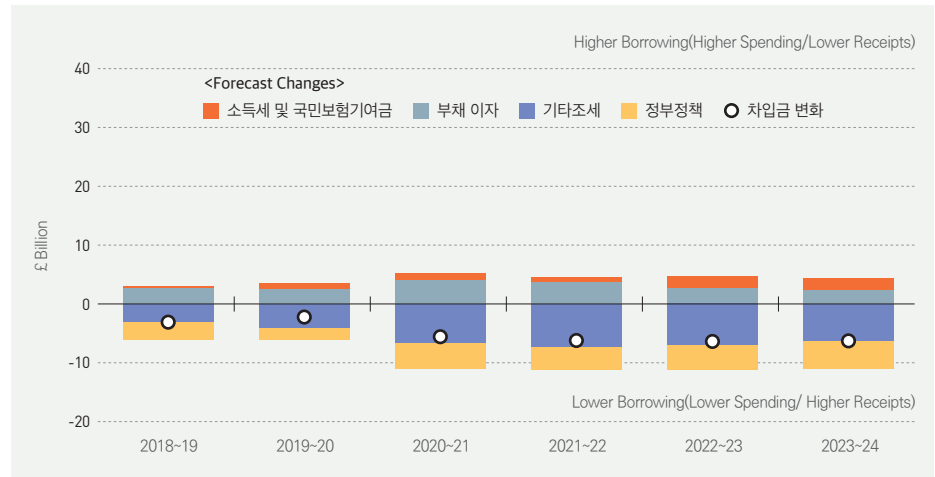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kr)

영국 예산책임청은 경제 및 재정전망 결과에서 브렉시트(Brexit)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2019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18년 10월 전망치(1.6%)에서 0.4%p 하락한 1.2%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잠재성장률은 지난 10월에 전망한 연간 약 1.6%에서 큰 변화가 없는 연간 약 1.5%로 전망했다.

2019년 공공부문 순차입은 세수증가와 이자 지출의 감소로 지난 10월 전망 대비 27억 파운드가 감소한 228억 파운드(GDP 대비 1.1%)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후 2020년 24억 파운드, 2021년 55억 파운드가 감소하여 2024년까지 63억 파운드가 세수증가와 이자지출의 감소로 순차입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1>.

영국은 2025-26 회계연도까지 균형예산 달성을 중기재정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와 브렉시트의 결과가 중기전망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인 2020-21 회계연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 이하로 낮추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정여력은 지난 10월 전망의 154억 파운드에서 266억 파운드(GDP의 1.2%)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그림 1. 영국의 공공부문 GDP 대비 순차입 전망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 3.

2018년 10월 전망이후 경제 여건 변화

(Economic Developments Since Our Previous Forecast)

2018년 3/4분기의 높은 경제성장률 상승세가 4/4분기의 경기둔화를 상쇄시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0.8%로 나타났다. 4/4분기의 경기둔화는 영국내 순수출 및 민간투자의 현저한 약세와 세계 경기둔화 및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다.

4/4 분기의 성장둔화는 영국뿐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2018년 4/4분기 유로 지역(EURO area)의 경제성장률은 3/4분기에 비해 0.2%p 둔화되었으며, 미국 또한 4/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하였다.

경제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2018년 하반기 21만 1,000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4.1%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와 함께 평균소득증가율이 2.1%로 증가하여, 2018-19 회계연도의 소득세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CPI¹⁾)은 2018년 4/4분기 2.3%에서 2019년 1/4분기 1.8%로 떨어졌다. 이는 국제유가(두바이유)가 2018년 3/4분기까지 배럴당 평균 75달러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4/4분기에 배럴당 평균 68달러로 급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영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7년 2월(2.3%) 이후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¹ 재정수입, 복지지출, 연간관리지출, 자원지출, 자본지출의 정부정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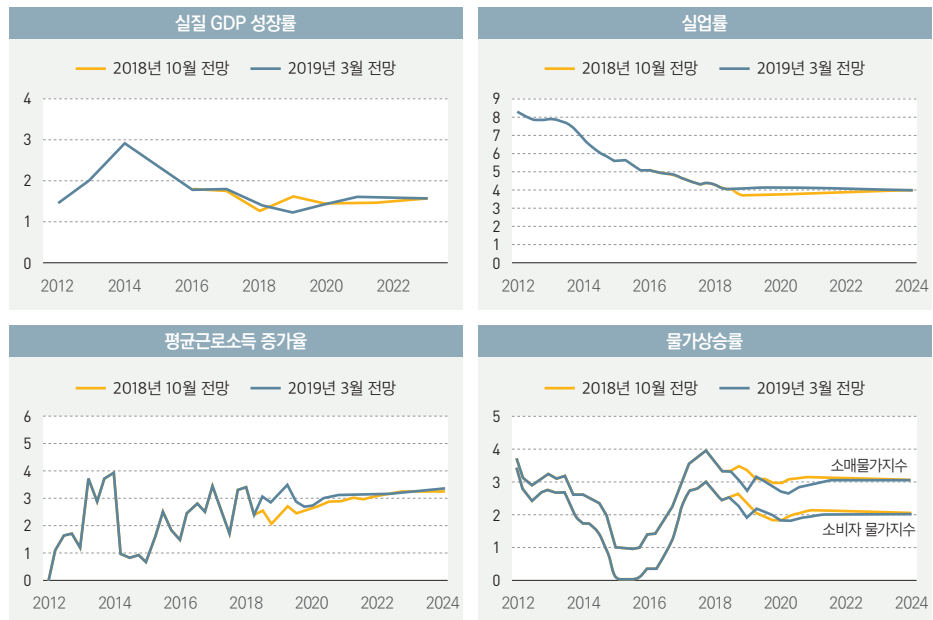
경제전망(The Economic Outlook)²

2018년 10월 전망에서 2019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1.6%로 전망하였으나 3월 전망에선 잠재 GDP 성장률보다 낮은 1.2%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연도인 2020년의 GDP 갭(Output Gap)³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2020년에 1.4%이며 2023년 1.6%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은 투자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6년 이후 투자규모는 2017년 1,899억 파운드에서 2018년 1,882억 파운드, 2019년 1,864억 파운드로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및 무역분쟁으로 세계 GDP 성장률의 하락은 영국 수출을 감소시켜 순수출은 매년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기업들의 고용여력이 줄어들어 따라 2018년 4.0%에서 2019년 4.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2022년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은 4.0%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평균근로소득 증가율은 2019년 3.1%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반영하여 2023년 3.3%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2019년 2.1%에서 2020년에 1.9%로 하락했다가 2021년부터 소폭 상승한 2.0%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2.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 3.



재정전망(The Fiscal Outlook)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순차입은 2009-10 GDP의 9.9%(1,531억 파운드)에서 세수 증가와 정부 지출의 축소 등으로 2018-19 GDP의 1.1%(228억 파운드)로 빠르게 감소했다. 2018-19 회계연도의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CAPSNB⁴)는 GDP대비 1.2%로 공공부문 순차입⁵(PSNB)인 GDP 대비 1.1%보다 조금 높은 높게 나타났다⁶.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은 재정건전화 목표인 2020-21 회계연도에 GDP 대비 0.8%로 목표치인 2%보다 낮을 것으로 보았다. 이후 공공부문 순차입은 꾸준히 감소하여 2023-24 회계연도에 GDP 대비 0.5%로 전망했다.

공공부문 순부채는 명목 GDP 상승, 정부 채무 수입·지출 전망 등을 반영하여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영국은행의 채권 발행 축소를 가정하여 2021-22 회계연도에 GDP 대비 74.9%, 2023-24 회계연도에 GDP 대비 73%로 전망했다.

표 1. 재정 전망 개요

(단위: 십억 파운드, %)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수입과 지출(Revenue and Spending)							
경상수입 (Sector Current Receipts)	753.1 (36.4)	789.0 (37.0)	811.4 (36.9)	844.0 (37.1)	874.0 (37.1)	906.6 (37.2)	941.5 (37.2)
총관리지출 (Total Managed Expenditure)	795 (38.5)	811.8 (38.1)	840.7 (38.2)	865.2 (38.0)	891.7 (37.9)	921 (37.7)	954.9 (37.8)
적자(Deficit: Current and Previous Fiscal Mandate Measures)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Cyclically Adjusted Net Borrowing)	41.5 (2.0)	24.9 (1.2)	28.7 (1.3)	18.9 (0.8)	15.9 (0.7)	13.9 (0.6)	13.4 (0.5)
공공부문 순차입 (Public Sector Net Borrowing)	41.9 (2.0)	22.8 (1.1)	29.3 (1.3)	21.2 (0.9)	17.6 (0.7)	14.4 (0.6)	13.5 (0.5)
부채(Debt: Supplementary Target)							
순부채 (Public Sector Net Debt)	1,779 (84.7)	1,803 (83.3)	1,838 (82.2)	1,828 (79.0)	1,796 (74.9)	1,838 (74.0)	1,878 (73.0)

주: ()는 GDP 대비 비중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 3.

² 영국 예산책임청은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조건이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2020년 12월까지 영국과 EU의 교역은 동일한 조건으로 보았다.

³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보여준다. 경기의 과열 또는 침체 여부와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⁴ Cyclically Adjusted Public Sector Net Borrowing을 의미한다.

⁵ Public Sector Net Borrowing을 의미한다.

⁶ 이는 2018-19 회계연도 GDP갭이 플러스 갭(Positive Gap)이라고 가정한 경우이다.

재정수입은 2018-19 회계연도에 GDP 대비 37.0%(7,980억 파운드)에서 2019-20 회계연도에 일부 연료세 및 주세 세율 동결, 소득세 공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0.1% 감소한 후, 2023-24 회계연도에 GDP 대비 0.2% 증가한 37.2%(9,415억 파운드)로 전망했다.

항목별로, 소득세는 2018-19 회계연도 GDP 대비 9%에서 생산성과 소득증가를 반영하여 2023-24 회계연도에 GDP 대비 9.3%(2,344억 파운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국민보험기여금(NICs)은 2018-19 회계연도 GDP의 6.5%에서 고용증가를 반영하여 GDP 대비 6.6%(1,673억 파운드)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2. 주요 세입 전망

(단위: 십억 파운드, %)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소득세 (Income Tax)	180.6 (8.7)	192.4 (9.0)	195.7 (8.9)	208.1 (9.1)	215.8 (9.2)	224.7 (9.2)	234.4 (9.3)
국민보험기여금 (NICs)	131.5 (6.4)	137.7 (6.5)	143.4 (6.5)	149.7 (6.6)	155.5 (6.6)	161.2 (6.6)	167.3 (6.6)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25.5 (6.1)	131.7 (6.2)	136.6 (6.2)	141.5 (6.2)	146.3 (6.2)	150.9 (6.2)	155.6 (6.2)
경상세입 (Current Receipts)	753.1 (36.4)	789.0 (37.0)	811.4 (36.9)	844.0 (37.1)	874.0 (37.1)	906.6 (37.2)	941.5 (37.2)

주: ()는 GDP 대비 비중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 3.

총관리지출(TME)⁷ 규모는 2023-24 회계연도에 GDP의 37.8%로 2018-19 회계연도 대비 GDP의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부처지출한도(DEL)⁸가 같은기간 GDP 대비 0.9% 증가(경상지출 0.3% 증가, 자본지출 0.5% 증가)하나, 연간관리지출(AME)⁹이 GDP 대비 1.2% 감소(공적연금 0.3% 감소, 복지지출 0.2%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⁷ 총관리지출(TME)은 부처지출한도(DEL)와 연간관리지출(AME)로 구성되어 있다.

⁸ 부처지출한도(재량지출)는 건강(NHS), 교통, 교육 등 3개년의 계획을 포함하는데 법정지출은 제외한다.

⁹ 연간관리지출(의무지출)은 사회보장 지출과 같은 3개년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을 포함한다.

표 3. 재정 지출 전망

(단위: %)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총관리지출 (TME)	38.5	38.1	38.2	38.0	37.9	37.7	37.8
부채지출한도 (DEL)	16.1	16.2	16.9	17.1	17.1	17.0	17.1
경상지출 (PSCE in RDEL)	14.0	13.8	14.2	14.3	14.2	14.1	14.1
자본지출 (PSGI in CDEL)	2.2	2.4	2.7	2.9	2.9	2.9	3.0
연간관리지출 (AME)	22.3	21.9	21.3	20.9	20.7	20.7	20.7
복지지출 (Welfare Spending)	10.6	10.5	10.3	10.2	10.2	10.2	10.3
APF에 대한 순부채이자 (Debt Interest Net of APF)	2.0	1.7	1.8	1.7	1.7	1.7	1.7
지방정부 경상지출 (Locally Financed Current Expenditure)	2.3	2.4	2.5	2.3	2.3	2.3	2.3
공적연금 (Net Public Service Pension Payments)	0.6	0.6	0.3	0.3	0.3	0.3	0.3
기타 경상지출 (Other PSCE in AME)	4.9	5.2	5.1	5.1	5.1	5.1	5.0
자본지출 (PSGI in AME)	1.9	1.5	1.3	1.2	1.1	1.1	1.0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 3.



Interview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이 동 석
사무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예산의 밑거름

국 민 참 여 예 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 올해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참여예산의 정착과 내실화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이동석 사무관을 만나 '국민참여예산제도'의 2년간의 발자취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담당.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oo@kpfis.kr) 글. 정재립 사진. 박창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국민이 국가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면서
사업제안부터 예산안 반영에
이르기까지 국가 예산의
전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사업제안 및 권리 (2~5월)	● 국민 사업제안(2~4월) ●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4~5월)
② 부처 예산안요구 (5월)	●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5월 말)
③ 제안사업 논의 (6~7월)	● 예산국민참여단 발족(6월) - 무작위 추출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 ● 참여단 회의 진행(6~7월) - 사업논의를 통해 후보사업 압축
④ 사업 선호도조사 (7월)	● 참여단 +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⑤ 정부예산안 반영 (~8월)	●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토대로 예산실 심의 ●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여예산안 상정·논의 ●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
⑥ 국회심의·확정 (9~12월)	●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국민이 제안하는 나라살림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도 운영과 교육 및 홍보 더불어 국내외의 제도를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도 동반한다. 그중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국민이 국가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면서 사업제안부터 예산안 반영에 이르기까지 국가 예산의 전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은 2~5월에 걸쳐 사업제안을 접수 받는다. 이렇게 제안된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한 후

에 사업숙성을 거쳐 5월 말에는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다.

국민의 참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안사업의 논의로도 이어진다.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 400명이 예산국민참여단으로 구성되어 6월에 사업논의를 통해 후보사업을 압축하게 된다. 7월에는 사업 선호도를 조사하고 8월에는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실의 심의를 거친다.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여예산안을 상정하여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이른다. 이후 9~12월에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 실질적인 예산에 편성되게 된다.

지난해에는 국민의 활발한 참여로 1,206건의 사업

이 접수되었으며, 38개 사업 928억 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2019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전체 참여예산의 70%를 차지하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새로이 발굴되었다. 올해에도 4월 15일까지 1,399건의 사업제안이 접수되었고 각 부처에서 사업화 자료를 작성 중에 있어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이동석 사무관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틈새를 메워주는 생활밀착형 예산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것입니다.”라며 “국민 세금을 더욱더 알뜰하게 사용하려는 건강한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진행 절차

1. 이슈선정



2. 온라인 토론



3. 국민참여토론회



4. 참여단 논의에 반영

국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

올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도 생겨났다. 국민의 참여가 주된 핵심인 만큼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중 첫 번째는 사업접수의 상시화를 들 수 있다. “지난해 1개월이었던 국민제안 접수기간을 올해 상시접수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일정상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시접수 기간 중 2월 13일에서 4월 15일까지 2개월의 집중접수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후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반영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동석 사무관은 접수기간의 상시화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인 동시에 국민제안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개선방안은 사업제안 범위의 확대이다. 국민제안의 범위가 신규사업에 한정되었던 지난해와 달리 기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수렴도 시도되었다. 또한 국민이 주요 사회이

슈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이 시범 실시되었다. “기존의 온라인 접수를 통한 제안사업은 각 부처의 자체적인 통과를 거쳐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제안은 구체적으로 사업의 물량과 단가까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롭게 실시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을 온라인 토론을 통해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화하는 방안입니



다."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는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국민참여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집중토론과 상시 피드백으로 구체적인 예산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 올해에는 아동보육 지원, 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중기·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 일터구축 3개의 이슈를 선정하여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를 진행하였고 곧 진행될 참여단 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일련의 과정을 기획하고 온라인 토론과 국민참여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예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기에 보람을 느꼈습니다."라며 이동석 사무관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진행하며 느꼈던 뿌듯함을 내비쳤다.

세 번째 개선방안은 참여인원의 확대로 예산국민참여단의 인원을 100명 증원한 것이다. 기존 300명이었던 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늘려 국민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었다. 예산국민참여단은 무작위 추출로 구성되며, 국민제안 중 부처 심사를 통과하여 사업화된 후보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도 진행하고 있다. "KTX 영상광고와 신문기고를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 회의가 있을 때 방문하여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토론과 국민참여토론회가 활발히 이루어져 국민참여예산이 더욱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예산이 앞으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정부의 예산사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응원해본다.



“

기존의 온라인 접수를 통한 제안사업은 각 부처의 자체적인 통과를 거쳐 다뤄졌습니다. 새롭게 실시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을 온라인 토론을 통해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화하는 방안입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인가요?

강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nykang@kpfis.kr)

창업을 준비할 때엔 사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은 무엇으로 해야 할지, 초기자본은 얼마나 모집해야 할지, 홍보는 어떻게 할지 등,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투자비용보다 더 많은 편익을 예상할 수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와 유사하게, 국가도 신규 사업을 시행할 때에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R&D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자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1999년 3월, 공공사업과 관련해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을 막고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기에, 중앙관서의 장¹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 기획재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그 후 평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²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³이 조사를 시행합니다. 평가기관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고 수익성을 계산하는 경제성 분석⁴, 사업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원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정책적 분석,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해당사업이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업에 대해 평가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기능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¹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² 사회간접자본(SOC), 건축, 보건·복지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한다.

³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한다.

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하며,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산정하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현금흐름과 실제 비용을 추정하여 이에 따라 재무적 수익성을 산정하는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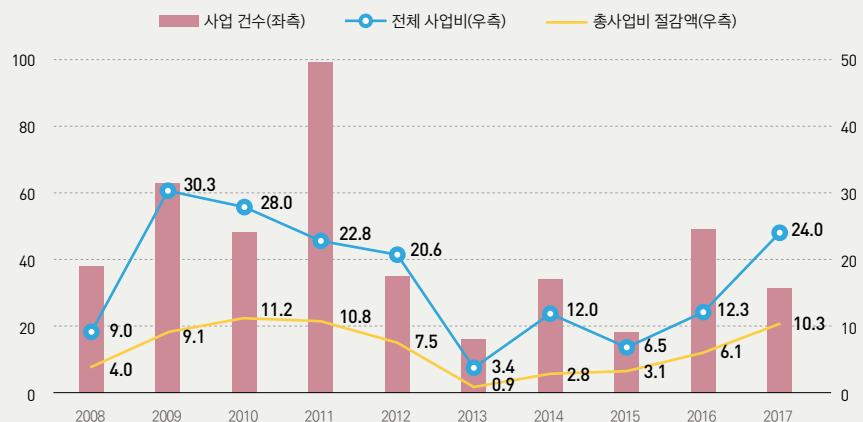
줄이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사업을 분산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 국가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한편, 조사기간이 길어지면⁵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적지 않은 조사비용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 ①사업목적과 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토목, 건축, 정보화, 기타 재정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31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절감한 예산액은 약 65.9조 원으로 규모라고 합니다.

올해로 스무 살이 된 예비타당성조사는 변화된 경제, 사회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작업이 한창입니다. 현행 평균 19개월이 소요되던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⁶. 변화된 국민의 필요를 반영하고, 재정효율화에 더욱 기여하는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단위: 개, 조 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7.

⁵ 원칙적으로 6개월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⁶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비타당성조사 개편방안」, 2019.4.2.

조선시대 관리들은 월급만으로 살지 못했다

근 이성주 「임기조선왕조실록」, 사자 문하 김경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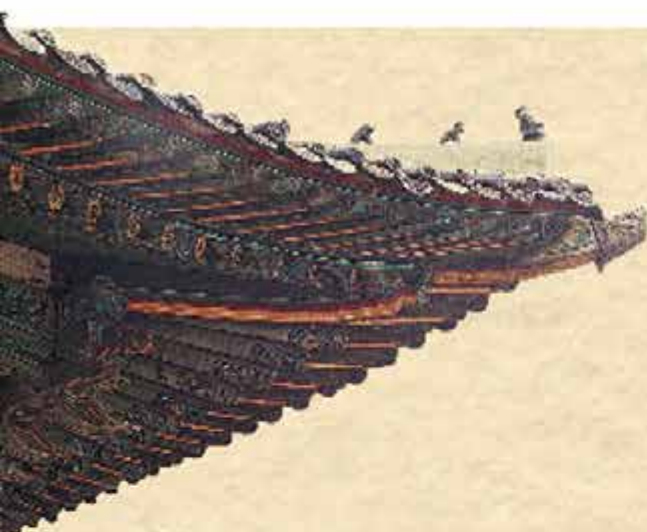
조선시대 관원들은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니 당연히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그럼 그 월급이 어느 정도였을까? 조선 후기 녹봉체계를 보면, 정1품 당상관(오늘날의 국무총리급)의 월급이 쌀 38두, 콩 20두였다. 즉, 국무총리가 쌀 38말과 콩 20말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소리다. 하위직, 그러니까 가장 말단이라 할 수 있는 정9품의 경우는 쌀 10두, 콩 5두를 받았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당시 물가를 고려한다 치면 그럭저럭 사는 정도였다. 1768년 서울의 쌀 시세를 보면, 쌀 1말이 상평통보 1냥으로 거래됐다(흉년과 풍년에 따라 쌀값에 변화가 있었지만 1냥 정도로 보면 됐다). 이 당시 집 시세를 보면, 초가는 보통 1칸에 10냥, 기와집은 1칸에 20냥 정도에 거래됐다. 평당 거래가라 생각하면 된다. 조선시대에 집의 규모를 세는 단위는 '칸'이었는데, 이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의미한다. 오늘날로 치면 원룸이라 할 수 있는 3칸짜리 집이 가장 작은 사이즈의 집이다. 역사책을 보면, 큰 부자들이 99칸 집을 짓고 살았다 하는데(양반들의 사치를 막기 위해 규모를 제한했다), 이보다 큰 집이 곧잘 보이곤 한다. 대부분 만석꾼들의 집이 이러했다.

집값만 놓고 본다면, 월급이 풍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물가를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관료이기 이전에 선비이므로 책을 읽어야 할 테니, 책값도 생각해 봐야 한다. 성리학자이니 당연히 《주자대전》(朱子大全: 성리학의 교조인 주희의 문집)을 읽을 텐데, 《주자대전》 75권의 가격이 16냥이다(조선의 책값은 비쌌다). 생활물가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양반이니 당연히 상투를 틀어야 하고, 상투를 틀기 위해선 말총을 묶어 만든 망건(綱巾)이 필수였다. 이 망건이 없으면, 갓이나 관모를 쓸 수가 없었다. 양반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다. 이 망건 1개의 가격이 1냥이었다. 겨울철에 입는 옷 한 벌의 가격이 4냥 정도였다. 월급을 생각하면, 지출이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월급으로 생활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더 등장한다. 바로 감록(減祿)이다.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다. 가난한 나라였기에 이룰 수 없이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 조선시대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5천 명 정도였는데, 이 중 4천 5백 명 정도는 직업군인들이었다.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아왔던 '전하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는 관료들이 고작 5백 명 내외였다는 소리다. 지방관아의 행정을 책임지는 이방이나 호방과 같은 아전들





월급을 받는 관료들도 툭 하면 월급이 '덜' 들어왔다. 이게 바로 감록(減祿)이다. 요즘 말로 치면 감봉(減俸)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세상에서 감봉이란 대부분 '징계'의 한 방편이라 생각하는데, 조선시대의 감록은 재정이 부족해서 관료들의 월급을 일괄로 줄이는 거였다.

減祿

은 기본적으로 '무급'이었다. 즉,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다. 이방이 서민들을 괴롭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월급을 받는 관료들도 툭 하면 월급이 '덜' 들어왔다. 이게 바로 감록(減祿)이다. 요즘 말로 치면 감봉(減俸)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세상에서 감봉이란 대부분 '징계'의 한 방편이라 생각하는데, 조선시대의 감록은 재정이 부족해서 관료들의 월급을 일괄로 줄이는 거였다. 그 이유란 것도 대부분,

“흉년이 들었기에 세수가 부족해서”

“중국 사신이 오는데, 그 접대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등 거의 예상되는(즉, 주기적으로) 이유에서였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1년 중 월급을 제대로 받는 달보다 제대로 받지 못하는 달이 더 많았다. 즉, 원래 받아야 할 녹봉은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관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던 걸까? 안 그래도 생활하기에 부족한 녹봉인데, 그나마도 감록되는 통에 조정 관료들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물론, 조정 관료들이 월급을 주 수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들에게는 따로 수입원이 있었으니, 바로 수증(受贈)이었다. 말 그대로 선물을 받는 것인데, 관료로서 중앙관직에 있으면 지방관들에게 선물을 받고, 반대로 지방직에 있을 때에는 중앙관료에게 선물을 보냈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일기를 보면, 이 수증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다.

“누구누구에게 쌀 3섬과 백지 100장을 받았다.”

“누구누구에게 쌀 10섬과 강릉세마포 20승을 보냈다.”

등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걸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치, 거래 장부를 쓰듯이 지방관으로 내려가면, 중앙의 관리들에게 ‘수증’이란 명목으로 선물을 보내고, 중앙에서 선물을 받던 이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중앙 관리들에게 다시 선물을 보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걸 명백한 뇌물이다.

그러나 이 당시에 수증은 관례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한데, 조선이란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이다. 나라의 세수가 부족해서 관료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줄 수 없었고, 나랏일을 하는 아전들에게는 아예 월급을 주지 못했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牧民心書)를 보면, 아전들이 백성들을 수탈하지 못하게 이들의 생활비를 따로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책을 만들 정도였다.

조선시대 청백리(淸白吏)제도를 만들어 청렴한 관리들을 포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청렴한 관리들을 만들 토대, 즉,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조선이기에 청백리를 포상하고, 이를 장려했던 거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조선의 관료제도는 부패와 부정이 싹틀 수 밖에 없는 제도였다. 맹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

이라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평온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나라의 재정이 풍족하다고 부패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건 당연한 수순일 거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고, 생활인이 아니겠는가? 생활이 안정돼야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명감도 생기는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19세기까지 유럽 최대의 지배가문이었다. 1848년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제위에 올랐을 때 그는 오스트리아 영지(저지와 상부 오스트리아 공작령과 스티리아 공작령, 카르니오라와 카린티아, 티롤 백작령, 포탈베르크, 고리치아, 그라디스카, 이스트리아 변경백령과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시)와 헝가리 국왕령(헝가리 왕국, 트란실바니아 대공국,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헝가리 군사 접경구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보헤미아 왕령(보헤미아 왕국, 모라비아 변경백령, 상부 및 저지 실레시아 공작령)과 갈리시아 왕국, 크라쿠프 대공령, 부코비나 공작령, 달마티아 왕령, 잘츠부르크 공작령도 그의 땅이었다. 여기에 비록 종이 위의 명목상 영지이긴 하지만 상부 및 저지 루사티아와 로렌, 키부르크도 법적으로는 합스부르크의 영지였다. 1291년 이후 실재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왕국도 이론적으로는 그의 지배지에 포함됐다.

과거 에스파냐 펠리페 2세 시대에 비해 제국의 규모가 줄어든 19세기에도 합스부르크가는 위세가 대단했다. 가문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



때로는 경제정책도 재정정책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글. 김동욱(dmdw@hankyung.com)

은 3,75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25만 7478km²의 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합스부르크 제국 내 인종도 550만 명의 독일인과 500만 명의 마자르족, 400만 명의 이탈리아인, 300만 명의 체코인, 250만 명의 루테네인, 200만 명의 루마니아인, 200만 명 가까운 폴란드인으로 구성됐다. 150만 명 규모 슬로바키아인과 비슷한 규모의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의 슬로베니아인과 75만 명의 유대인, 50만여 명의 집사와 기타 아르메니아인, 불가리아인, 그리스인들도 제국의 신민이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제국이 산산이 민족단위 별로 쪼개져 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한 후대 역사가들의 평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앤드류 위트크로프트는 1900년 파리 박람회의 한 장면을 통해 합스부르크 제국의 후진성을 상징적으로 꼬집는다. 당시 오스트리아 육군은 박람회 대상을 탔다. 그런데 수상 이유가 가장 좋은 총을 갖추고 있어서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신행 대포를 보유하고 있어서도 아닌 가장 우아한 군복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한 박한 점수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각된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더더욱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했던

국가에선 특히 평이 좋지 못했다. 1950년대까지 헝가리 역사학자들은 헝가리가 하울만 '이중제국'이었을 뿐 사실상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에 불과했다고 봤다. 헝가리 역사가 오스카 야스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자본이 결탁해서 헝가리와 루마니아, 슬라브 지역민들이 거주하던 곳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단언했다.

민족감정에 보다 덜 치우쳤던 역사가들도 지리적 이유 등으로 제국이 경제적 중심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넓은 제국은 지리적으로 통합돼 있지 못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아드리아해 주요 항구로 가는 주요 내륙수운도 갖추지 못했고, 도나우강은 당시 선박의 운항이 쉬운 항로가 아니었다. 제국 영토의 3분의2가량은 산악지대나 구릉지였다. 이에 따라 보헤미아는 강의 수운을 따라 오스트리아보다는 독일 경제권에 편입됐고, 갈리시아와 부코비나는 험준한 산맥 탓에 제국 내의 다른 경제권과 연결이 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포탈베르크는 정치적으로는 합스부르크 영지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스위스와 슈바벤의 변직공업지대에 속한 측면이 더 컸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합스부르크 제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 데이비드 F 굿 미네소타대 교수 등이 철도망이 확장되면서 합스부르크 제국 내 지형적 제약이 극복됐고 은행망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이 두드러졌다는 설명을 내놨다. 제국 내의 지역적 경제통합도 탄력을 받았다고 본다. 1910년 시점에 범형



가리 영토였던 트란실바니아 지역에선 인구 10만 명당 96km의 철도망을,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지역에선 82km의 무시하지 못할 규모의 철도망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스트리아 본토에 필적하는 규모며 루마니아(49km), 불가리아(42km), 세르비아(31km)에 비해선 헝가리 지역은 차별을 받기보단 개발의 혜택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1870~1900년 기간 동안에 제국 내 철도망은 네 배로 연장됐다.

철도의 발달에 따른 수혜지역에 보헤미아 지역은 빠지지 않는다. 페트르 초르네예와 지르지 포코르니 등 체코 학자들에 따르면 19세기 중엽에 이미 보헤미아 지역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산업지대가 됐다. 국내의 철도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통합의 효과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비트코비체철강사나 필젠에 있던 스코다 작업소, 브라우하우스 같은 기업들은 전 유럽에 명성을 떨쳤다. 프라하의 뿐만 아니라 오스트라바, 클리드노(휘텐베르크와 콜베르크바우사의 거점)를 비롯해 기계공업의 중심지였던 브른, 유리공업에서 강점을 보였던 북부 보헤미아, 직물산업의 중심지였던 동북부 보헤미아 지역 등 보헤미아 전 지역이 비교적 골고루 산업화의 수혜를 입었다.

그 결과 합스부르크 제국 내 체코인들의 영역은 전체 토지의 26.4%에 불과했지만 제국 전체 인구의 35%를 체코인이 차지할 정도로 보헤미아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도 나쁘지 않았다. 보헤미아 지역의 인구밀도 역시 1854년 1㎢당 84명에서 1880년에는 104명으로 늘었다. 1910년에는 1㎢당 128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1910년 현재 오스트리아 지역 인구밀도인 1㎢당 95명을 뛰어넘을 정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징표로 해석됐다. 체코 지역에서 인

구 1만 명 이상 도시는 1880년 38개에서 1910년 77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체코 도시인의 숫자는 80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9세기 후반 지역 간 통합이 강화되면서 상품가격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어졌고, 이자율과 임금수준도 평준화돼 갔다. 당시 인도가 곡물가에서 지역별 편차가 오스트리아-헝가리보다 컸고, 국가 내 이자율 격차는 미국이나 일본이 오스트리아-헝가리보다 심했다는 국제비교도 곁들여졌다. 불균등 발전의 수준으로 보자면 남부에서 노예제를 유지했던 미국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보다 심했다는 주장이다.

앨런 스캐드 러던 정경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합스부르크 제국이 외부의 혼란을 잘 견뎌냈고, 변화의 활력이 강했던 나라로 바라본다. 다양한 민족들을 통치해 온 합스부르크제국의 마지막 몇 년은 민족주의 등장으로 필연적으로 파멸과 쇠퇴로 향하는 길고 긴 과정에 불과했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통설에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합스부르크 제국이 무너진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제국이 그처럼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더 신기한 일이었다.

하지만 스캐드 교수에 의해 제국은 시대에 뒤쳐진 구식 체제이자 노화된 인위적인 구조물로서 스스로 개선할 에너지나 유연성을 갖추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1848년 혁명기의 혼란기에 체제를 위협하는 도전을 받았지만 이를 극복한 능동적인 존재로 재해석됐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867년에서 1914년 사이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은 1848년 혁명 당시처럼 체제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다. 제국의 붕괴에 대한 내부 압박도 없었다. 오히려 몇몇 제국의 문제점들은 이미 해결

됐거나 타협을 이뤄가고 있었다. 경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제국은 삶의 수준과 인프라, 금융 측면에서 꾸준히 더욱 통합돼 가고 있었다.

1870년에서 1913년 사이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경제는 매년 평균 1.32% 수준씩 성장했다. 이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수준이었고 오직 독일만이 이에 필적하는 성장세를 유지했다. 후발주자 중에는 스웨덴과 덴마크만이 합스부르크 제국에 견줄만 했다. 1871년에는 헝가리 지역에선 성장이 더 빨라 평균 1.7% 수준이었다. 1878년에는 헝가리 지역에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돼 이 지역에선 당시 유럽에 퍼져있던 대불황의 징후마저 없었다. 1840년대 헝가리의 대(對)오스트리아 수출품의 90%는 농산품이었지만 1909~1913년 기간에는 전체 수출품의 44%를 공업제품이 차지했다. 187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제국의 연간 철강 소모량은 네 배로 늘었다. 많은 학자가 '산업혁명' '테이크 오프'단계로 이 시기 합스부르크제국을 설명하게 됐다. 비록 제국 내에서 서쪽 지방이 보다 빨리 발전하긴 했지만 제국 전체적으로는 19세기 초에 비해 후진성은 더 빠르게 극복됐다.

물론 이중적인 면도 있었다.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던 오스트리아는 서유럽 선진국과 경쟁하기 힘든 낮은 품질의 제품을 헝가리 지역의 큰 내수시장에 팔아먹으면서 덩치를 키웠다. 그렇다고 헝가리가 손해만 본 것도 아니었다. 헝가리도 제국 내에서 착취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제국의 양분을 빨아먹었다는 게 진실에 가깝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다.

실제로 1906년 이후로는 여러 민족 문제도 해결국면이었고 헝가리와의 오스트리아의 통합도 잘 이뤄지고 있

었다고 한다. 외교적으로도 합스부르크 제국은 독일의 든든한 동맹국이었다.

에르네스트 겔너는 “불평등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고 문화나 관습적으로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가 널리 퍼져 있다면 사람들은 불평등을 견디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했다. 19세기 말 합스부르크 제국은 불안 요인도 많았지만 언어·문화·교육의 동질화·집중화 작업도 적지 않았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의 문맹률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독일보다 낮지 않았다. 제국 내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것의 위상은 불어나 이탈리아어를 쓰는 것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었다. 1867년 제국 기본법은 제국 내 신민들을 언어나 인종에 따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합스부르크제국 행정조직도 확장돼 1890~1911년 기간에 내부 행정공무원 수는 366% 증가했다. 공공교육, 복지, 보건, 법치의 유지 등에서 당시 기준으로 충실한 인프라가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민족주의의 영향도 제국해체의 원심력이 제국통합의 구심력보다 더 강했다고 단정하긴 힘들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합스부르크 제국이 망한 것은 자체로 파멸과 분열의 씨앗을 배태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과 그 동맹국들이 1차 대전에서 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수정론자의 요지다. 1914년 당시 시점에서 합스부르크제국의 약점은 제국내 다양한 민족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문제 등이었으며 1차 대전의 패배라는 외부 요인이 없었으면 제국은 더 안정적으로 존속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때로는 잘 굴러가던 정부의 경제정책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다.

참고 문헌

- Alan Sked. 「The Decline and Fall of the Habsburg Empire 1815-1918」. Longman. 1994.
- Andrew Wheatcroft. 「The Habsburgs-Embodying Empire」. Penguin Books. 1995.
- Christopher Clark. 「The Sleepwalkers-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Penguin Books. 2013.
-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Blackwell. 1993.
- Otto Urban. 「Czech Society 1848-1918」 in Mikuláš Teich(Edited). 「Bohemia i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Petr Čornej-Jiří Pokorný. 「Kurze Geschichte der böhmischen Länder bis zum Jahr 2004」. Práh. 2003.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교보문고



저자 송병건
출판사 아트북스
발간일 2019년 05월

세계화의 단서들

경제학자가 그림으로 읽어낸 인류의 경제 문화사

이 책은 세계화 단서들을 통해 세계의 진화사에 주목한다. 지난 2000여 년 동안의 인류사를 네 시대로 구분하고 스물두 가지의 중요한 세계화 경험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각 장의 첫머리에 제시되는 그림에서 역사적 단서를 살살이 찾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경제사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이 책은 경제사의 시각에서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닌 '읽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 그 시대의 경제적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그림의 시대적 맥락을 알아보고 동시대의 생활상을 재구성하여 역사적 중요성을 평가해보는 것이 경제사적 그림 읽기의 핵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하나오카 사치코
일러스트 하마바타케 가노우
옮긴이 송서휘
출판사 서해문집
발간일 2019년 05월

경제용어도감

오늘날 세계를 설명하는 핵심 경제용어

이 책은 경제·경영 서적에 자주 등장하는 경제 관련 필수 용어를 풍성한 일러스트와 친절한 문장으로 해설하여 담았다.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모르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어려운 경제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다. 수요, 공급, 기회비용과 같은 개념부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행동경제학 등의 심화 경제 이론까지 총 237개의 용어를 엄선했다. 관심사나 이해도에 따라 선택해 읽을 수 있어, 경제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독자에게 경제 상식을 쌓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용어를 쉽게 알아가는 경제학 가이드북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 마리 J 부샤, 다미앙 루슬리에
옮긴이 유길순, 이상윤
출판사 알마
발간일 2019년 05월

사회적 경제의 힘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

이 책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 비중과 규모를 파악해보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책이다. 2015년에 CIRIEC 인터내셔널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경제' 과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저자는 사회적 경제 통계 방법론 구축을 위해 연구에 나섰던 CIRIEC 인터내셔널 연구팀의 성과를 이 책에 담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관한 문헌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빈틈을 메워주고 있다. 이 책은 사회적 경제 통계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사회적 경제 통계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가 더 잘 이해되게 할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저자 다니엘 스테드먼존스
옮긴이 유승경
출판사 미래유산유한사람들
발간일 2019년 04월

우주의 거장들

하이에크 프리드먼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치의 탄생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한 방대하고 세세한 역사적 분석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시장의 원리가 경제 및 사회 영역에 관철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고안하는 데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개인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경쟁적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의 행동과 연결 짓는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라 정의하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기원부터 신자유주의가 미치는 영향까지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대담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에티오피아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지원



한국재정정보원은 5월 8일(수), 18층 대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 KSP 사절단 9명 및 KDI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기관사업을 소개하고, dBrain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였다. KSP란, 기획재정부와 KDI가 20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

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말한다. 에티오피아 KSP는 2011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22건의 정책자문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18~2019년 KSP 주요사업은 '공공부문 혁신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공기업 개혁,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KSP 사절단은 5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2019년 상반기 재정정보 활용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는 5월 27일(월), '재정정보 활용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재정정보 활용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우리 원이 관리하는 재정시스템을 통해 생성·축적된 광범위한 재정정보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

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경제·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활용에 대한 역할과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방안을 위한 포럼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발전을 반영한 재정정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5월 30일 (목),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 방안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재동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으며, '데이터 기반의 재정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미국 OMB의 IT 대시보드 사례에 대하여 설명했다. IT 대시보드는 미국 연방정부와 공공기관, 일반 대중 등이 연방정부 IT 사업의 세부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로 IT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보기 쉽게 알려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날 IT 대시보드의 주요 기능, 운영과 관리체계, 성과 및 주요 특징에 대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데이터 관리체계의 중요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데이터 개방', '벤치마킹'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2019 dBrain 사용자협의체 간담회 개최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시스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6월 4일(화) '2019 사용자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30개 부처의 수입·채권·지출·조달(계약) 실무자

와 dBrain운영본부 운영자가 참여하였다.

특히 올해 간담회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상업무, 참여인원, 토의시간을 확대하였으며, dBrain서비스 개선의견 및 차세대 dBrain시스템 구축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주제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도출된 의견은 내용분석 및 주무부처와 협의 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진행결과를 사용자와 공유할 계획이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애 독 자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UIZ



아래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문 제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 수정 등
변경을 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으로 전쟁,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의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
narajaejung@kpfis.kr

【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19. 06. 24. ~ 2019. 07. 14.

POSTCARD



5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 재정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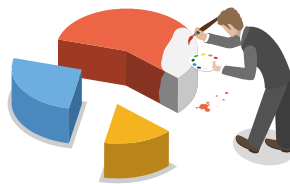
☆ 상품 당첨자 ☆

tit*****@naver.com
cym*****@naver.com
yjc*****@yahoo.co.kr
woo*****@yahoo.co.kr
jun*****@naver.com
kim*****@gmail.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쿠폰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번 호 나라재정에서는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칼럼의
‘빈부격차 해소’ 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기사 속 내용처럼 국가재정의 주요 목표는 빈부격차 해소이며,
국가재정을 통해 사회복지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 정책이야말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향한
올곧은 방향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국가재정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위해 빈틈없이 사용되어
국가다운 국가,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ym*****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9 772508 897000
ISSN 2508-8971